

연구총서 2000-07

중·미관계와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신상진

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중·미관계는 1990년대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로 작용해 왔고, 21세기에도 한반도 안보와 통일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미간 안보관계 변화가 이들 두 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고, 21세기초 중·미간 전략적 경쟁관계 하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에 대한 중·미의 입장과 정책변화를 전망하는 동시에, 한국의 바람직한 대중·미 외교안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1. 1990년대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1990년대에 들어 중국과 미국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협력을 지속하였지만, 정치·안보 면에서는 경쟁관계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와 달리 중·미관계가 사안에 따라 갈등을 보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1989년 천안문사건과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하여 중·미 모두가 소련 견제를 위해 상대방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상호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지역안정 유지에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었던 바, 1990년대 중·미관계는 갈등 속에서도 협력을 모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이 시기 중·미관계는 대체적으로 4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어 왔다. 첫번째는 미국 부시 행정부 말기로, 소련을 겨냥한 중·미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양국간 관계가 소원해지

기 시작한 시기이다. 둘째는 미 클린턴 행정부 초기로서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면서 대만문제, 인권문제 및 중국의 대외무기 수출문제 등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세번째는 중·미 양국 지도자가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건설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한 시기이다. 그러나 중·미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98년말 이후 중·미관계는 새로운 경쟁관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 중·미관계는 점차 협력적 측면보다는 갈등요인이 더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중·미는 지역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문제와 대만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보였다. 중·미 사이에 때로는 협력적 측면이 부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요인이 더 부각되기도 하였는데, 중·미관계 변화에 따라 한반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중·미관계가 다소 긴장관계로 발전하더라도 양국은 한반도 안정유지 문제에 있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방법면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이견이 노정되었다. 중·미관계에서 협력측면이 부각될수록 중국이 미·북관계 개선을 묵인하고 지지하는 강도가 강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반면, 중·미관계가 경색될수록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문제 해결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한국과 정치·안보관계를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한·중 정치·안보관계가 심화되었다.

## 2. 21세기초 중·미관계 전망

향후 10년 정도까지 중·미관계는 현재와 같이 사안에 따라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과 대만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안정 유지를 위해 미국과 협력을 바라고 있을 것이며, 미국도 중국을 시장경제체제로 완전히 편입시키고 대만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아·태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 중국과 접촉을 지속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 증강과 대만의 독립여론 심화 가능성 및 TMD와 NMD 구축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미간 협력기반은 현재보다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미관계는 '전략적 경쟁관계'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경쟁관계는 본질적으로는 경쟁관계이지만,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사안에 따라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이는 적대국관계와 전략적 협력 또는 동반자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편, 부시 차기 미 행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중·미관계가 단기적으로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부시 진영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과 안보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만을 미국의 맹방으로 지목하고 「대만관계법」에 의거, 대만에 무기수출을 확대하고 대만의 TMD 가입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이들은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NMD와 TMD계획 지속추진 및 ABM조약 폐기와 CTBT조약 비준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이 부시 진영의 이러한 안보정책 방침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차기 미 대통령 하에서 중·미간 안보갈

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전략적 경쟁관계 하에서 주요 안보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이견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세계질서관의 차이이다. 미국은 ‘패권안정론’에 입각하여 세계질서 주도권을 유지하려 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패권질서를 반대하면서 다극화 질서 형성을 계속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추진하면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듯이, 중국이 미국의 주도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안보관의 차이이다. 미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동맹관계를 통해 세계질서를 주도하려 하는 반면, 중국은 동맹을 통한 안보는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면서 협력안보를 통해 세계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역설할 것이다. 중국의 국력이 증대될수록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대화를 보다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미국의 동맹을 통한 지역질서 주도전략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셋째, 중·미는 문화적으로도 상이한 가치관을 신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내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을 시장경제체제에 완전히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촉진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인권압력과 체제변혁 유도정책을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에 자유권과 발전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둘러싸고 마찰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관행을 고려할 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에도 중국과 미국간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무역역조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주권제한론을 둘러싸고서도 중·미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은 1999년 나토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나토 신전략개념’ 아래 주권

제한론을 주창하면서 유엔안보리를 통하지 않고 주권국가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개인의 인권이 국가주권보다 상위의 개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유엔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국은 미국이 '나토 신전략개념'을 대만해협사태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안정 유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이러한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불가피 할 것이다. 또한 중·미 사이에는 세계질서 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입장이 상이하게 표출될 것이다.

### 3. 21세기초 중·미관계와 한반도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중·미관계에서 경쟁적 측면이 확대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중·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미는 한반도에서 각기 영향력 확대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중·미의 외교정책은 더 적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만의 안보를 강화하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TMD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데, 중·미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게도 TMD체제 참여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특히 대북 접근정책을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계할 것이다. 대미관계에서 갈등요인이 부각될수록 중국은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이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이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남북한에 대해 외교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내에 붙잡아 두려 할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안보접촉을 확대하여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체제의 구심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은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반대하면서, 한·미·일간의 ‘합중전략’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과 안보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 러시아와의 안보협력 확대라는 ‘연횡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미·일 공조체제가 냉전시기의 동맹을 통한 안보조치라고 비난하고,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국간의 ‘상하이 5국회의’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국간 협력대화를 역설하게 될 전망이다.

중·미 경쟁관계 하에서 한·중간 경제교류·협력 진전추세는 지속될 것이나, 정치·군사분야에 있어서는 한·중관계가 복잡 미묘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1994년과 1999년의 경우처럼 한·중간 정치·안보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미관계에서 경쟁적 측면이 부각될 경우, 미국은 한·일과 안보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한·중 안보관계 강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공감하면서 4자회담 구도를 지지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

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게 되면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부담이 줄어들고 주한미군 철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 하에 4자회담 재개에 적극 지지 입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중·미간의 안보적 갈등이 부각되게 되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구상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1996년 4자회담 제의 초기 중국이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4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중·미간에 쉽게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미의 입장도 중·미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 그리고 중·일관계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견해와 정책방향을 좌우하게 될 핵심 변수는 중·미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안보적 경쟁이 부각될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고 한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지속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한·미 군사동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한국에 의해 통일된다면 자국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로 남기를 바라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현상변화를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동북아 역할증대를 둘러싸고 중·일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국은 통일한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강력한 국가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통일한국이 중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중국이 통일한국을 이용하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모험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 4. 한국의 대중·미정책 방향

21세기초 중·미간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1세기 중반까지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극화가 진행되는 ‘일초다강’의 질서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다원화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러시아와도 정치·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중국과 정치·군사적 신뢰를 확대함으로써 대북 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안보협력 확대는 한국의 안보부담을 완화하고, 동북아에서 남북한간 및 중·미, 중·일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중·러와 안보교류·협력을 모색하면서 미국에 대해 충분한 사전 양해와 사후 통보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중·미간 갈등이 부각될수록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은 중·미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 수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이 강대국간 갈등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간 이해대립이 심화되지 않

도록 대중·미 협력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TMD 구축문제와 대만문제로 인한 중·미간 갈등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TMD체제 불가입 입장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다자안보대화체를 활용해야 한다. 지역 다자안보대화는 중·미갈등을 완화하고 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미간 충돌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메카니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자안보대화는 역내 분쟁발발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교안보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시 차기 미 행정부가 대북 강경성향의 정책을 채택하고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게 될 가능성도 예상되는 바, 한국은 미국 조야에 햇볕정책의 실체와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북한에게는 대미 타협정책 필요성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이견이 분출되지 않도록 대미·대북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차기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 및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주한미군의 대만해협사태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중국견제 메카니즘으로 보고 있는 바,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만해협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미관계와 중·일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대만해협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북 군사동맹조약 폐기를 선불리 제기할 필요는 없다. 중국과 북한간 군사동맹조약 폐기나 수정을 한국이 중국에 촉구할 경우, 중국은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선불리 대만과의 정치관계 복원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변화 유도와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이 대만문제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 및 의회 차원, 특히 야당 의원들이 대만 의회와 의원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단교 이후 심각하게 손상된 신뢰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있다.

## 목 차

I. 서 론 .....	1
II. 1990년대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	5
1. 중·미관계의 변화 .....	5
가. 전략적 협력 약화기(1990~92) .....	6
나. 이해대립 배태기(1993~96) .....	9
다. 전략동반자관계 모색기(1997~98) .....	13
라. 전략적 경쟁관계 전환기(1999~) .....	15
2.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문제 .....	18
가. 전략적 협력 약화기 .....	19
나. 이해대립 배태기 .....	21
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모색기 .....	24
라. 전략적 경쟁관계 전환기 .....	27
III. 21세기초 중·미관계 전망 .....	31
1. 중국의 발전방향 전망 .....	31
가. 경제력 .....	32
나. 군사력 .....	35
다. 정치체제와 대외환경 .....	38
2. 중·미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정책 .....	41
가. 중국 .....	41
나. 미국 .....	44

3. 중·미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	47
가. 중·미 협력요인 .....	48
나. 중·미 갈등요인 .....	51
4. 중·미관계 전망: 전략적 경쟁관계 .....	55
<b>IV. 21세기초 중·미관계와 한반도 .....</b>	<b>61</b>
1. 중·미간 경쟁과 동북아질서 .....	61
가. 미·일동맹 .....	61
나. 중·일동맹 .....	62
다. 중·러협력 .....	63
라. 대만해협 긴장 .....	64
2. 중·미간 경쟁과 한반도 .....	66
가. 중·미의 한반도정책 .....	66
나.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에 미칠 영향 .....	67
<b>V. 한국의 대중·미정책 방향 .....</b>	<b>75</b>
1.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75
2. 대미정책 .....	77
3. 대중정책 .....	79
<b>VI. 결 론 .....</b>	<b>81</b>
<b>참고문헌 .....</b>	<b>85</b>

## I. 서 론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경제·군사·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 유일 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 강대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은 한·일과의 동맹관계를 주축으로 하여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으며, 21세기에도 미군 주둔을 통해 역내 질서 안정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의 국력과 중국의 발전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상당기간 동안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단극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기도하는 핵심국가 역할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sup>1)</sup>

이처럼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갈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 두 강대국이지만, 이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바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북한 핵·미사일문제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중·미는 이들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안정을 위해 양국이 대립하기보다는 협력 자세를 보여 왔던 이유 중의 하나는 중·미관계에서 갈등보다 협력적

---

1) Coral Bell, “American Ascendancy and the Pretense of Concert,” *The National Interest*, No. 59 (Fall 1999), pp. 55~63.

## 2 중·미관계와 한반도

측면이 우세하였고 중국이 미국의 주도권을 위협할 만큼 강대국으로 부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초 중국의 종합국력이 더 신장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미국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도래된다면,<sup>2)</sup>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미가 반드시 협력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심지어 브레진스키는 향후 한반도가 중·미간 경쟁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sup> 대만문제, 미·일동맹문제, 역내 미군문제 및 전역미사일방어(TMD)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미간 이해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미간 합의도출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지역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중·미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다. 19세기말 이조가 열강의 세력다툼 속에서 바람직한 외교정책 노선을 강구하지 못하였을 때, 개화파 지도자 김홍집은 청나라의 황준셴(黃遵憲)이 집필한 『조선책략』에서 제시한 외교노선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조는 스스로 바람직한 외교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강대국이 제의한 노선을 추종했던 것이다. 결국 이조는 러시아라는 외세를 견제하기 위해 ‘친중, 결일, 연미’(親中,

2) 1993년 국제통화기금(IMF)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이 이미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였고, 2020년 경에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더욱이 미국 랜드연구소는 2010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가 1조 1,300억 달러로 확대되어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Susumu Awanohara, Lincoln Kaye, "Number Gam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5, 1993, p. 74; Charles Wolf, Jr. et al., *Long Term Economic and Military Trends, 1994~2015: The United States and Asia* (Santa Monica, Calif.: Rand, 1995), pp. 5~8.

3)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New York: Basic Books, 1997), pp. 158~165.

結日, 聯美) 노선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이조에 대한 외세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더 심화되었다.<sup>4)</sup>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일·러가 전개하고 있는 영향력 확대 움직임은 19세기의 상황과 흡사한 측면이 많다. 20세기와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외교정책인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외교정책 노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점차 중국에 편향된 외교노선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보아야 할 시점이다.

중·미관계는 1990년대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로 작용해 왔고, 21세기에는 한반도 안보와 통일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Ⅱ장에서 1990년대 중·미간 안보관계 변화가 이들 두 나라의 한반도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중·미간 안보관계가 변화된 시기별로 북한 핵·미사일문제와 미·북관계 개선문제 등 한반도 주요 통일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중·미의 정책 변화를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21세기초 중·미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인지를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중국의 급속한 국력부상이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우선 중국의 국력을 미국과 비교하여 분석·전망하고, 중·미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정책 그리고 협력요인과 갈등

4) 黃遵憲, 『朝鮮策略』 (서울: 건국대 출판부, 1977), p. 47; 한우근, 『韓國通史』 (서울: 을류문화사, 1980), pp. 416~418; Jae Ho Chung, *The Korean-American Alliance and the 'Rise of China': A Preliminary Assessment of Perceptual Changes and Strategic Choices*, Discussion Pape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tanford University (February 1999), pp. 5~6.

#### 4 중·미관계와 한반도

요인을 분석하는 바탕 위에서 중·미관계를 전망한다.

IV장에서는 중·미관계에서 경쟁적 측면이 부각됨에 따라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미 양국의 입장과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문제와 한·미동맹 및 중·북동맹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를 분석·전망한다.

끝으로 제V장에서는 21세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실현 과정에서 한국은 중·미에 대해 어떠한 외교정책 노선을 전개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Ⅱ. 1990년대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 1. 중·미관계의 변화

1990년대에 들어 중국과 미국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협력을 지속하였지만, 정치·안보면에서는 경쟁관계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와 달리 중·미관계가 사안에 따라 갈등을 보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1989년 천안문사건과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하여 중·미 모두가 소련 견제를 위해 상대방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sup>5)</sup>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상호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지역안정 유지에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었는 바, 1990년대 중·미관계는 갈등 속에서도 협력을 모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이 시기 중·미관계는 대체적으로 4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어 왔다. 첫번째는 미국 부시 행정부 말기로, 소련을 겨냥한 중·미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양국간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둘째는 미 클린턴 행정부 초기로서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면서 대만문제, 인권문제 및 중국의 대외무기 수출문제 등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세번째는 중·미 양국 지도자가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건설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한 시기이다. 그러나 중·미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98년말 이후 중·미관계는 새로운 경쟁관계로 진입하고 있다.

5) Michael Oksenberg, “The China Problem,” *Foreign Affairs*, Vol. 70, No. 3 (Summer 1991), pp. 1~2.

### 가. 전략적 협력 약화기(1990~92)

1990년대 들어 중국과 미국은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경제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소련이라는 최대 위협국에 대항하기 위해 덜 위험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호적 자세가 변화되게 된 또 다른 이유로는 1989년 천안문사건 당시 중국정부의 무력진압 행동과 미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내 여론동향 때문이었다. 중국이 천안문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지식인들을 무력을 통해 진압하자, 미국은 중국내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92년은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미국 내에서 반중국적인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클린턴은 중국정부를 ‘악마 집단’으로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1991년 말까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고위급 지도자 방문이 단절되었으며, 중국내 인권문제, 무기수출문제 그리고 무역역조문제 등으로 중·미관계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초 부시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뒤 거의 2년만인 1991년 11월이 되어야 야 비로소 베이커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미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제기된 것은 중국내 인권문제였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부터 중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해 주었으나, 1990년부터 중국내 인권상황을 고려하여 대중 최혜국대우를 1년 단위로 연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천안문사건 당시 체포된 정치범을 석방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6)</sup> 이에 중국은 미국의 인권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1991년 11월 최초로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천안문사건 주동자였던 한동광(韓東方)과 왕요우차이(王有才)를 석방하는 동시에 재소자가 생산한 제품의 대미 수출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였다. 결국 미 행정부는 1990년 이후 대중 최혜국대우를 1년 단위로 조건 없이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민주주의 촉진과 중국내 개혁·개방과의 입지 약화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다.<sup>7)</sup>

미국의 대대만 첨단무기 판매와 중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핵기술과 미사일부품 수출 의혹도 중·미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1992년 9월 부시 미 대통령이 대만에게 150대의 F16 전투기 판매를 결정하자, 중국은 미국의 결정이 1982년 중·미간의 '8.17 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면서 비난하였다.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등에 대한 중국의 핵기술과 미사일 부품수출 의혹도 중·미관계 진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 국무부와 의회는 알제리, 파키스탄, 시리아 등 국가에 대한 중국의 핵기술과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출 의혹을 제기하고, 대중 첨단기술 수출 중단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에게 미사일확산 방지 노력에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리펑(李鵬) 중국 국무원 총리는 해외 무기판매문제에 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불공정한” 자세를 반박하였다.<sup>8)</sup>

무역불균형 현상 심화도 중·미관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

6) 『한국일보』, 1991. 5. 8.

7) “Don't Break America's Strongest Bridge to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1, 1991; 曾馳遠, “中美圍繞最惠國待遇交鋒,” 『爭鳴』 (1991. 6), pp. 44~45.

8) 『朝鮮日報』, 1992. 6. 26.

국은 대중 무역역조의 상당부분이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서 기인한다면서 중국에게 수입관리체제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도높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다.<sup>9)</sup>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사절단을 파견하여 대규모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sup>10)</sup> 지적재산권 보호협상을 타결짓고 수입조절세 폐지와 관세율 인하 등 대외무역체제 개혁을 약속함으로써 대미 무역마찰을 해소하고자 하였다.<sup>11)</sup>

이처럼 전략적 협력 지속 필요성 약화로 인하여 중·미 간에는 인권문제와 무기수출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중국과 미국은 일부 사안에 있어서 상호 상대방과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중·미관계에 근본적인 이해대립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중국은 1992년 2월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여 대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였고, 미국은 걸프사태와 한반도 문제 해결 등 지역안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다. 특히 1990년 8월 걸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은 중국의 지지 없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라크 제재조치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조건없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등 사안에 따라 협력자세를 보였던 것이다.<sup>12)</sup>

9) 『人民日報』, 1991. 6. 16.

10) 1991년 1년 기간동안에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4억 달러 상당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China Daily*, October 19, 1991.

11) 『人民日報』, 1992. 1. 18~19.

12) Michael Oksenberg, “The China Problem,” pp. 2~3; Robert Sutter, “Tiananmen’s Lingering Fallout on Sino-American Relations,”

베이커의 방중시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준수를 재확인하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준수를 구두로 약속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일부 반체제인사의 출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 나. 이해대립 배태기(1993~96)

1993년 클린턴이 미국의 힘의 우위 지속,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신장을 모토로 내걸고 미국의 42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미국의 대중정책은 부시의 대중정책에 비해 다소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중국내 인권개선과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 유도 및 군축노력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대중 압력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1993년 화학무기원료를 이란에 수출하려 한다는 혐의를 구실로 중국국적 선박 ‘은하호’를 공해상에서 수색하였고, 2000년 베이징올림픽 개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1994년에는 대만과 고위인사 교류 허용,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허용 및 주미 대만대표부의 지위격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대만 관계강화 조치를 취하였다.<sup>13)</sup> 이에 따라 1995년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미국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1979년 미·대만 단교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만 최고위급 지도자의 방미였다는 점에서 중·미관계를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변화시켰다.

*Current History*, Vol. 90, No. 559 (September 1991), p. 249.

13) 奮然, “美國爲何調整對台關係?,” 『鏡報』 (1995. 2), pp. 80~82.

이 기간동안 미 의회도 중국내 인권문제, 대만문제, 무기수출문제 그리고 무역역조문제를 구실로 대중 압력을 강화하였다. 미 의회는 「대대만 무기수출 한도 제한 철폐안」, 「티베트법안」, 「자유아시아방송 설립법안」, 「대만의 유엔가입 지지안」 및 「중국인권 결의안」 등 반중국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미 의회가 중국에 무역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경우 중국내 인권상황과 중국의 핵·미사일 기술수출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 행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함으로써 중·미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 중·미 사이에 이해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1993년 초부터 미국에서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이익과 세계 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당시 미국에서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의 경제력을 평가하면서 중국경제가 세계 3대국 수준에 도달하였고, 2010년 내지 2020년 경에 이르면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다소 과장된 평가들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중국이 경제력을 신장하게 되면 이를 군사력 증강에 투입하게 됨으로써 동아시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 또는 강대국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춘 국가는 대외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상타파적 성향을 보인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중국을 평가하였던 것이다. 따

14) Ross H. Munro, “Eavesdropping on the Chinese Military: Where It Expects War—Where It Doesn’t,” *Orbis*, Vol. 38, No. 3 (Summer 1994), pp. 355~372에서도 이러한 논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

라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중국을 파악하였던 미국 학자와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은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경계하면서 중국에 대한 개입정책보다는 봉쇄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15)</sup>

한편, 중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계 신질서 구축을 주장하는 동시에 주변국가와의 선린관계 강화를 적극 모색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가 기본적으로 평화와 발전의 양대 특징을 보이면서 발전하고 있지만, 특정국가의 패권적 행동이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내정불간섭 등 평화공존 5개 원칙이 존중되는 다국화 질서 구축을 제창하였다. 또한 중국은 핵실험을 지속함으로써 미국이 유지하고자 하였던 핵실험 유예체제에 위협을 가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대중 견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 동남아국가연합, 몽골, 베트남 그리고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계개선 정책을 전개하였다.<sup>16)</sup> 중국의 대주변국 외교는 상당부분 대미관계를 고려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도 중국의 대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4년 이후 덩샤오핑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중국에서는 권력승계문제가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장쩌민(江澤民)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민족주의자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의 압력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견

15) Denny Roy, “Hegemon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Summer 1994), pp. 149~168; 신상진, “중국의 대외관계연구,” 정재호 편, 『중국 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 2000), pp. 207~208.

16) 중국의 대주변국 관계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James C. Hsiung, “China’s Omni-directional Diplomacy,”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p. 576~586 참조.

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대만문제와 인권문제와 같이 중국이 내정문제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였던 것이다.<sup>17)</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0년대 중반 중·미간 이해대립이 노정되기 시작하였으나, 중·미 양국 모두 여전히 상대방과의 관계단절을 바라지는 않았다. 미국 내에서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및 중국내 인권개선과 국제규범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 개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봉쇄정책보다는 ‘포괄적 개입정책’을 공식 대중 정책으로 추진하였다.<sup>18)</sup> 중국 역시 군부와 보수파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sup>19)</sup> 미국과 마찰을 벌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미국에 대해 “신뢰를 강화하고, 마찰을 줄이고, 협력을 확대하며, 대결을 벌이지 않는다”(增加信任, 減少麻煩, 發展合作, 不搞對抗)는 정책을 추진하였다.<sup>20)</sup>

결국 중·미는 1993년 이래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계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인권대화과 군사안

17) David Shambaugh, “Containment or Engage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2 (Fall 1996), pp. 189~191.

18) 중국에 대해 개입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대표하는 논저로는 David Shambaugh, “Containment or Engagement of China?” pp. 180~209; Kenneth Lieberthal, “A New China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6 (November/December 1995), pp. 35~49 등이 있다. 아울러 Bill Clinton, “To Advance the Common Interest in a More Open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 1994 참조.

19) 齊辛, “強硬路線君臨中國大陸,” 『九十年代』 (1994. 5), pp. 40~43.

20)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4. 3. 11.

보대화를 통해 안보적 신뢰를 모색하는 동시에 최혜국대우 부여 문제와 무역역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협상을 통해 해소하였다.

#### 다. 전략동반자관계 모색기(1997~98)

1997년과 1998년에도 중국과 미국은 대만문제, 미·일동맹 강화문제, 인권문제 및 중국의 대이란 핵기술 수출문제 등으로 인하여 긴장이 조성되었으나, 장쩌민의 미국방문과 클린턴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점차 갈등이 완화되고 협력분위기가 확산되었다.

1997년 초 중·미관계는 미국이 대만에 대해 F16 전투기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일본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국이 일본과 신안보협력지침을 채택하고, 일본 주변유사 상황시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만해협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추게 됨으로써 중국은 극도의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미국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인권 결의안을 상정하고, 티벳문제 담당 특별조정관을 임명하여 티벳 소수민족의 종교자유를 요구하는 등 중국에게 인권압력을 가하였던 점도 중·미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이란에 대한 중국의 화학무기와 핵기술 수출이 중동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대중 첨단기술 수출금지정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갈등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은 “이해를 증진하고, 합의를 확대하고, 협력을 발전시키며, 미래를 공동으로 창조해 나간다”(增進了解, 擴大共識, 發展合作, 共創未來)는 보다 진일보한 대미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sup>21)</sup> 미국 역시 견

21) 陶堅, “構建中美關係的戰略經濟基礎,” 『世界知識』, 1998年 第14期 (1998. 7), p. 10.

제정책보다는 개입정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중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인권개선 요구를 내정간섭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웨이징성(魏京生)과 왕단(王丹) 등 정치범을 석방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식 가입하는 등 타협자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은 「화학 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고, 「핵수출통제조례」를 제정하여 무기수출을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무기수출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마찰소지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 기간동안 군사교류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미·중간 군사·안보협력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1997년 중국의 해군함정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미국 본토에 기항하였으며, 1998년에는 미국의 2개 함정이 중국의 청도 해군기지에 정박하는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졌다. 샬리카 시빌리 미국 합참의장과 요한슨 미 해군작전부장 그리고 코언 국방장관의 중국방문이 성사되었고, 중국측에서도 푸첸요우(傅全有) 총참모장, 츠하오텐(遲浩田) 국방장관 그리고 장완넨(張萬年) 당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중국 군부내 최고위 지도자들의 미국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양국간 군사교류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중·미간의 안보협력 강화 추세는 장쩌민의 미국방문과 클린턴의 중국방문을 통해 제도화 단계로 발전하였다. 1997년 10월 장쩌민의 미국 국빈방문은 1985년 리셴넨(李先念) 국가주석 방미 이후 중국 최고지도자로서 최초의 방미였으며, 여기에서 양국은 ‘건설적 전략·동반자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중·미는 상호간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21세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대결과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협력과 공존관계를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중·미는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 협력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해 핵무기 기술과 탄도미사일 부품수출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기술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다.<sup>22)</sup>

1998년에는 클린턴의 방중이 성사되었는데, 이는 1989년 2월 부시 대통령의 방중 이후 약 10년만에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었다. 중·미는 전략핵 상호 불거냥에 합의하였고, 이로써 중·미관계가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클린턴은 중국방문시 중국이 주장하는 두 개의 중국반대, 대만독립 반대 그리고 대만의 유엔가입 반대 등 '3불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중·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중·미는 「생물무기 방지에 관한 공동성명」과 「인명살상용 지뢰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남아시아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으로 인한 남아시아 긴장 악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점차 축소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중국은 파키스탄과 이란 등에 대한 핵기술 및 미사일기술 수출 중단을 재보장하였다.

#### 라. 전략적 경쟁관계 전환기(1999~)

1997년 클린턴의 방중 이후 확산되었던 중·미간 협력추세는 1998년 말부터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반중국 성향의 미 의회는 1979년 이래

---

22) 『文匯報』, 1997. 10. 31.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과 핵기밀을 불법적 수단을 통해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콕스보고서」를 작성하여 미 행정부에 대중 압력 행사를 요구하였으며, 1999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가입과 대대만 방어무기 판매를 촉구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였다.

더욱이 1999년에 들어서는 미 의회 의원들이 대만을 TMD체제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대만안보강화법안」을 발기하였으며, 미 국방부는 「대만해협안보정세보고서」를 발표하여 대만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5월에는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중·미 관계는 1979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행동을 패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미국과 고위 군사교류, 핵확산방지·군축·국가안보대화 및 인권대화 중단 등의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였다.<sup>23)</sup> 이후 미국 의회는 콕스보고서를 공개하여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취하였다.

이처럼 중·미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미·일동맹 강화, TMD 구축 구상 및 나토의 동유럽 확대 등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유럽 정책을 대중 포위전략으로 간주하고, 다극화 질서 구축을 주창하면서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나토의 방위 범위를 나토 회원국 영토 바깥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유엔 안보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나토의 군사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토 신전략’ 개념을 약소국의 내정을 간섭

23) 이로써 당초 예정되었던 코언 미 국방장관의 중국방문과 중국 구축함 청다오(靑島)호의 미국 해군기지 기항 그리고 스윈성(石雲生) 중국 해군사령관의 미국방문 등이 취소되었다.

하기 위한 패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였다.<sup>24)</sup> 또한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10만 명의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하고, 일본과 공동으로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연구개발하기로 하는 등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25)</sup>

미국이 중국견제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대처하려 하고 있다. 중·러는 국제관계의 다극화가 신국제질서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패권정책을 공동으로 견제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미·일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공동 연구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공동 인식을 확인하였다.<sup>26)</sup> 아울러 중국은 해·공군 전력증강 차원에서 러시아로부터 연간 10억 달러 상당의 군사무기·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중국과 군사무기·장비 판매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sup>27)</sup> 결국 동아시아에서는 미·일동맹 강화와 중·러 전략 협력·동반자관계 심화라는 두 개의 서로 경쟁적인 집단간의 느슨한 대결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건과 콕스보고서 공개 등으로 중·미관

24) 王在邦, “北約新戰略挑戰世界新秩序,” 『瞭望』, 1999年 第16期 (1999. 4), pp. 16~17; 徐學銀, 朱憲, “評新干涉主義,”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8期 (1999. 8), pp. 19~22.

25) 施魯佳, “美國推行全球霸權戰略的架構與步驟,” 『瞭望』, 1999年 第19期 (1999. 5), p. 52; [www.xinhua.org/international/996111109224.htm](http://www.xinhua.org/international/996111109224.htm).

26) “中國促警斥新干涉主義,” 『文匯報』, 1999. 8. 26.

27)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1990년대 이래 7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제 최신 무기·장비를 구매하였다. 러시아의 대중 무기수출은 러시아 대외 무기수출 총액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2000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신형 구축함 1척을 도입하였고, 수호이 30 전폭기와 R-77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SS-N-22 함대함 미사일 등을 구매하였다.

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였으나, 199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대중국 관계복원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중·미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은 유고주재 중국 대사관 오폭사건 직후 취소하였던 미 해군함정의 홍콩항구 기항을 허가하였고, 중·미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타결지었다.

중·미는 단극질서 유지와 다극화 질서 형성이라는 서로 상이한 국제질서관을 가지고 있고 신봉하는 사회제도와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는 두 강대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과 지원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고, 미국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같은 지역안정 유지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미는 사안에 따라 갈등을 보이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악화된 긴장국면을 해소해 왔다.

## 2.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문제

한반도는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미국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전략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가 상대방의 세력범위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당분간 현상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미는 한반도의 급격한 현상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중·미는 한반도문제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1990년대 중·미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한반도문제, 특히

북한 핵·미사일문제와 미·북 관계개선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과 정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가. 전략적 협력 약화기

중·미간 전략적 협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던 1990년대 초 북한의 핵시설 사찰문제가 제기되었다.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도 평화와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은 ‘비핵5원칙’을 발표하고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나아가 남북한은 같은 해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1992년 1월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을 선언하였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 수용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IAEA의 핵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자, 미국은 북한의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핵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북한의 핵사찰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압박하였다.<sup>28)</sup>

이 시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해 왔던 전술핵을 철수하고 남북한 모두 핵무기와 핵 재처리시설을 갖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중국 역시 동북아 지역국 중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역내 군비증강과 한반도 불안을 막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였다.<sup>29)</sup>

28) 전성훈,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북한 핵문제: 전망과 과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6~12.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1991년 5월부터 북한으로 하여금 IAEA의 사찰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국장급 협상을 진행하여 협의하였다.<sup>30)</sup> 1991년 11월 베이커 미 국무장관 방중시에도 중·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특히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설득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중국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정책에 동조하였다. 다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sup>31)</sup>

이처럼 북한 핵사찰문제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입장 사이에 쉽게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미가 지역안정유지 문제에 있어서 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과 미국간에는 인권문제, 대만문제 및 무기수출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나, 한반도 긴장완화, 동북아 핵 비확산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에 있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던 것이다.<sup>32)</sup> 특히 1991년 유엔가입문제로 남북한관계가 경색되었을 때에도 중국은 리펑 총리와 치엔치첸(錢其琛) 외교부장을 북한에 파견,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설득하여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였다.<sup>33)</sup>

29) “奮發圖強，勝利前進，”『人民日報』，1991. 9. 9; “歡迎朝鮮爲實現朝鮮半島無核化超出的努力，”『人民日報』，1991. 12. 25.

30) 『동아일보』，1992. 5. 10

31) 한·중수교 직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辛季，“水到渠成，意義深遠，”『文匯報』，1992. 8. 25.

32) 『人民日報』，1991. 11. 16; Jia Hao and Zhuang Qubing,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2, No. 12 (December 1992), pp. 1140~1141.

33) 田進，俞孟嘉，『中國在聯合國—共同締造更美好的世界』(北京：世界知識

## 나. 이해대립 배태기

1993년부터 중·미 사이에는 ‘중국위협론’, 대만문제 그리고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중·미는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개선문제 등 한반도문제에 대해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의견차이를 보였다.

1993년 초 IAEA가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해 특별 핵사찰을 요구하고 한·미가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하자,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에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범세계적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운 양면전략을 통해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하였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1994년 10월 미국은 북한과 제네바 합의문을 타결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핵협상을 계기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sup>34)</sup> 미국은 북한과 접촉수준을 높이고,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고, 미사일협상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였지만,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미국과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군사력과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비

出版社, 1999), pp. 71~73.

34)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북한 핵동결,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대북 경제제재의 부분적 해제, 정치·외교관계 개선 등 포괄적 관계개선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핵화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sup>35)</sup>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는 것에도 반대하였는데,<sup>36)</sup> 이는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미관계에 대한 지렛대 약화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개선을 약속하기 이전까지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정경분리정책을 추진하였다. 1992년 8월 중국은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지만, 한국과는 경제교류·협력에 중점을 두고 정치안보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중국은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한 후 러·북관계가 악화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북한을 우선시하는 정책자세를 견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4년 10월 미국이 북한과 핵합의를 이루면서 대북 관계개선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한국과도 정치관계를 강화하고자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취하였다. 같은 해 10월 리펑 총리가

35)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경제지원과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핵개발 카드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Banning Garrett,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 537; "朝鮮接受核查, 中國表示歡迎," 『文匯報』, 1994. 2. 18.

36) 리자오싱(李肇星)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준수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유엔이 북한 핵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파키스탄과 함께 기권표를 행사하였다.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안은 찬성 13표, 기권 2표로 통과되었다. 田進, 俞孟嘉 『中國在聯合國—共同締造更美好的世界』, pp. 73~75; "安理會決意促朝鮮遵守不核擴散條約," 『文匯報』, 1993. 5. 13; Julia Preston, "China Not on Board Over North Kor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11, 1994.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 핵문제와 한·중관계 개선문제를 협의하였고, 1995년 5월에는 차오스(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한·중간 의회관계 강화와 지도부간 교류 확대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1월에는 장쩌민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관계발전문제를 논의하고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sup>37)</sup> 이처럼 중국 최고지도부가 앞다투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미·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반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네바 핵 기본합의와 미·북관계 개선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미·북관계 개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sup>38)</sup>

4자회담 개최문제를 둘러싸고서도 미국과 중국간에 이해대립이 노정되었다. 1996년 미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자회담을 제의하였다.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와는 달리 4자회담의 한 당사국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나, 4자회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국이 4자회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이유는 북한의 반대입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4자회담이 미국의 주도하에 제의되었기 때문이었다.<sup>39)</sup>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는 등 미국이 대중 견제정책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과 함께 제의한 4자회담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경계하였던 것이다.

1996년 3월 대만총통 선거를 전후하여 중국이 대만의 독립여론을

37) 『文匯報』, 1995. 11. 15.

38) Banning Garrett,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p. 542.

39)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19~27 참조.

잠재우기 위하여 대만의 지룽과 까오슝 인근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대만해협에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함으로써, 중·미관계는 1979년 관계정상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였다. 또한 4자회담 제의 다음날 미국은 일본과 「신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중국은 중국 견제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였다.<sup>40)</sup> 대만해협 사건 이후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중국견제·봉쇄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4자회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sup>41)</sup>

#### 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모색기

중·미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기간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예비회담 이후 1997년 12월 비로소 4자회담 본회담이 성사되었다. 회담 개최 제의 1년 반만에 4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던 일차적인 배경은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과 대일 수교협상 재개 등을 위해 종전의 반대 입장을 수정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중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중국은 4자회담을 대미관계 개선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6년 말 이후 중국은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되었던 대미관계를 완화함으로써 대내 경제건설에 유

40) 張大林, “日美同盟何處去,”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1期 (1996. 1), p. 26; 袁明, “21世紀初東北亞大國關係,”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4期 (1996. 10), p. 21.

41) 중국은 미국이 4자회담을 제의하게 된 이유가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고, 한반도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있다고 인식하였다. 李福興, 陳世森, “朝鮮半島問題四方會談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2期 (1998. 2), pp. 10~11.

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려 하였던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한반도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확보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42)</sup>

중국은 4자회담 1차 본회담에 당시 외교부 부부장이었던 중량급 인사 탕자취엔(唐家璇)을 대표로 파견하여 4자회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기조발언에서는 “다른 3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sup>43)</sup>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중국은 분과위 구성문제와 의제문제 등에 있어서 북한과 한·미 간의 첨예한 입장차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4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건설적으로 기여하였다. 중·미 관계개선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4자회담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1998년 8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문제가 미·북한 사이에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뉴욕과 베를린 등지에서 대북 협상을 개최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 등과의 국제협력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윌리엄 페리를 대북정책 조정관에 임명하여 대북정책 권고안(페리보고서)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미국과 일본이 TMD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하고 일본이 군사력 증강 움직임

42)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p. 23;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중국은 북한핵문제를 대미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 蜀聲, “中共鬪美一王牌—北韓核武,” 『爭鳴』(1994. 5), pp. 77~78.

43) “朝鮮半島問題四方正式會談第一次會議在日內瓦舉行,” 『新華月報』, 1998年第1期(1998. 1), pp. 117~118.

을 확대하자 북한 미사일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장완넨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1998년 9월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일본에게 군사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 구실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도 위협을 느낀다고 밝혔다.<sup>44)</sup>

이처럼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였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중·미간에 군사안보 협력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안보협력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sup>45)</sup> 코언 미 국방장관이 중국 내 군사기지를 방문하였고, 장완넨과 왕커(王克)를 비롯한 중국군 수뇌부가 미국내 주요 군사기지를 방문하는 등 군사교류가 어느 때보다 심화되었다. 더욱이 1998년 6월 클린턴 방중시 장쩌민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대해서도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였는 바,<sup>46)</sup> 이러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도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4)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8-1999』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52~53.

45) 신상진, “북미관계와 중국,” 『통일시론』, 1999년 겨울호 (2000. 1), pp. 97~99.

46) 중·미는 생물무기 방지에 관한 공동성명과 인명살상 지뢰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남아시아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으로 인한 남아시아 긴장악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점차 축소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중국은 파키스탄과 이란 등에 대한 핵기술 및 미사일 기술수출 중단을 재보장하였다. [www.usembassy-china.org.cn/english/press/hot/Prcfact1.html](http://www.usembassy-china.org.cn/english/press/hot/Prcfact1.html).

### 라. 전략적 경쟁관계 전환기

전술한 바와 같이, 1999년 중·미관계는 TMD 공동 연구개발 등 미·일동맹 강화와 나토의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 및 대만문제 등으로 인하여 1979년 이래 가장 경색되었다. 중국은 1999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나토 지도자회의에서 확정된 ‘21세기 신전략개념’과 1998년 이래 미·일이 추진하고 있는 TMD 공동 개발 노력이 세계질서를 미국이 독단적으로 지배하고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봉쇄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sup>47)</sup>

미국은 한반도문제, 대만해협문제 그리고 남중국해문제를 동아시아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3대 요소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이 지역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 안정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을 들고 있다.<sup>48)</sup>

이처럼 1999년 이래 중·미관계에서 경쟁적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지만,<sup>49)</sup> 한반도 안정유지를 위한 양국의 협력기조에는 큰 변화가 나타

47)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중국내 미국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Phillip C. Saunders, “China’s America Watchers: Changing Attitudes Towards the United States,” *China Quarterly*, No. 161 (March 2000), pp. 41~65 참조.

48) 楚樹龍, “冷戰後中美雙邊和地區戰略與安全關係,” 『現代國際關係』, 2000年 第5期 (2000. 5), pp. 7~8.

49) 중·미관계 권위자인 삼보 교수는 중·미관계가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경쟁자관계로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략적 경쟁자관계는 냉전기 미·소간의 전략적 적대관계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국제질서관과 전략적 이익이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많은 문제에서 협력이 가능한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David Shambaugh, “Sino-American Relations: From Partners To Competitors,” *Survival*, Vol. 42, No. 1 (Spring 2000), pp. 97~115.

나지 않고 있다. 중·미는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있어서는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통일 이후까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강압적인 조치를 병행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하는 반면, 중국은 남북한 주도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군사·정치·경제적 압력과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해 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문제 처리과정을 통해서도 중·미의 이러한 입장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군사력 사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중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역안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축소 해석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였다.<sup>50)</sup> 물론 중국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미·일의 TMD 구축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반대하였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미국과 다른 견해를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sup>51)</sup>

50) 대미관계가 갈등으로 치달았던 1999년 상반기까지 중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1999년 9월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중·미 정상회담에서 관계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발사문제’라는 시각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쩌민 주석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불리한 일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9. 9. 12.

51)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발사를 반대하면서도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미관계에서 경쟁적 측면이 부각됨에 따라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관계발전정책은 더 적극화되었다.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한국과 군사교류 확대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이 1999년 8월 조선태 국방장관을 초청하여 한국전 참전 중국 군부대와 북해함대 사령부를 시찰할 수 있게 하였고, 이로써 한·중간 최초의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중국이 동북삼성 중심지인 선양에 한국 영사사무소 설치를 허가한 것도 한국과의 정치관계를 한 단계 확대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관계복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미국의 폭격기가 유고주재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직후인 1999년 6월 중국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초청하여 식량 15만톤과 코크스 40만톤 등 전략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의 패권정책에 반대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한·중수교 이후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였다.<sup>52)</sup> 이러한 사실은 중·미관계 변화가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sup>53)</sup>

요컨대, 1990년대 중·미관계는 점차 협력적 측면보다는 갈등요인이 더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중·미는 지역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

---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미 의회에 제출한 대북정책 권고안에서도 북한 미사일 개발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다. “페리보고서,” 『통일시론』, 1999년 겨울호 (2000. 1), p. 198.

52) 『人民日報』, 1999. 6. 5.

53) 중국의 학자들은 미국이 대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미국의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安洪泉, “調整中的美國對朝鮮政策,”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7期 (1999. 7), p. 24. 중·미관계가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정종욱, “4대 강국의 한반도정책,” 『계간사상』, 2000년 가을호 (2000. 9), p. 45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질서 구축문제와 대만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보였다. 중·미 사이에 때로는 협력적 측면이 부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요인이 더 부각되기도 하였는데, 중·미관계 변화에 따라 한반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중·미관계가 다소 긴장관계로 발전하더라도 양국은 한반도 안정유지 문제에 있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방법면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이견이 노정되었다. 중·미관계에서 협력측면이 부각될수록 중국이 미·북관계 개선을 묵인하고 지지하는 강도가 강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반면, 중·미관계가 경색될수록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문제 해결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한국과 정치·안보관계를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한·중 정치·안보관계가 심화되었다.

### Ⅲ. 21세기 중·미관계 전망

중·미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강화되어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에서 기인한다. 신흥 강대국으로 도약하였던 독일이 ‘팩스브리타니카’(Pax-Britanica)에 도전함으로써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던 것처럼, 21세기 중국의 국력이 더욱 신장되어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국 지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경우 중·미 간에 적대적 대립이 전개될 수도 있다.<sup>54)</sup> 그러나 현재와 같이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국 지위가 유지되고 중국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 중·미관계는 계속 사안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래 중국이 어떠한 국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중·미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에 의해 미국의 대중정책이 상당부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중국의 발전방향을 분석·전망하고, 중국과 미국이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중·미관계에 주요 이슈가 될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중·미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 1. 중국의 발전방향 전망

21세기 중국은 어떠한 나라로 발전할 것인가? 중국의 정치체제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지지도 그리고 대만문제와 중·미, 중·일관계 등과 같은 주변환경 요인도 중국의 발전을 좌우하는 요인

54) Arthur Waldron, “How Not to Deal with China,” *Commentary*, Vol. 103, No. 3 (March 1997), pp. 44~49.

이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초 중국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와 대외환경 요인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sup>55)</sup>

### 가. 경제력

중국은 개혁·개방 결과 1970년대 말 이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0여 년 동안 중국은 연간 9%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국내총생산액(GDP) 규모로 세계 7대국으로 도약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2010년까지 연간 7.9%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동안 매년 6.6%의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sup>56)</sup> 중국이 이러한 발전목표를 계획대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2010년 경 중국경제 규모는 2000년의 2배로 확대되어 세계 4대 경제국으로 도약하고, 2020년 경에는 세계 3대 경제국 수준으로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sup>57)</sup> 그러나 중국이 연간 6%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미국이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

55) 클라인은 국력을 “한 국가가 상대국을 설득이나 강제 또는 무력에 의해 상대국의 의사에 반하여 싫은 일을 하게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경제력과 군사력 이외에 국가전략 목적과 추구 의지 및 인구나 영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Ray S. Cline, *World Power Trends and U.S. Foreign Policy for the 1980s* (Boulder: Westview Press, 1980).

56) “未來十年年均增長擬達7.9%,” 『文匯報』, 2000. 1. 18.

57) 林利民, “關於中國21世紀初對外戰略的幾點思考,” 『現代國際關係』, 2000年 第3期 (2000. 3), p. 12; 『信報財經月刊』, 1999年 9月號 (1999. 9), p. 12에서 재인용.

망되고 있다<sup>58)</sup>

중국이 수출지향적 발전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무역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고 있다. 1999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3,607억 달러로 29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기 이전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206억 달러로 세계 32위에 불과하였으나, 중국은 현재 세계 9위의 무역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1999년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1%를 상회하였는 바,<sup>59)</sup>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 경 중국은 세계 5위 이내의 교역국 지위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한편, 1999년까지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유치하기로 계약한 외자규모는 6,137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에 실제투자된 외자는 3,07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1999년 1년 동안에도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404억 달러를 투자하였다.<sup>60)</sup>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외자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에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 말 기준 중국은 1,574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홍콩과 마카오

58)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종합국력연구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3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중국이 연간 7%, 6%, 5%대의 종합국력 신장률을 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이 미국의 국력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기 36년, 47년, 70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綜合國力課題組, “世界主要國家綜合國力評估,” 『國際資料信息』, 2000年 第7期, 袁鵬, “當前中美關係性質芻議,” 『現代國際關係』, 2000年 第9期 (2000. 9), p. 5에서 재인용.

59) 이 시기 전세계 무역증가율은 4%에 불과하였다.

60) 『人民日報』, 2000. 2. 2.

가 보유하고 있는 1,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을 포함할 경우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의 양자협상이 이미 타결됨으로써, 2001년 초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대외 수출과 외자도입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며,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경제 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 이내 중국은 세계 3대 경제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수많은 장애요인들에 직면해 있다.

우선 중국은 적자투성이인 국유기업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 시장경제 부문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은 1998년부터 GDP의 35%, 무역의 50%, 고용의 55% 정도를 담당하는 국유기업 개혁작업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sup>61)</sup> 도시 실업자가 1,200만 명에 달하는 등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21세기에도 급진적인 성장을 지속하려면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사영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사업분야에 사영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하여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한 결과, 지역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확대되어 사

61) 국유기업 개혁작업을 적극화하기 이전인 1997년 6,599개의 대중형 국유기업이 적자를 보았으나, 1999년 이들 중 3,100개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었다. 1999년 국유기업의 영업이익이 1998년 대비 70% 증가한 900억 위엔에 달하였다. 『人民日報』, 2000. 2. 19.

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이래 중국은 서부 내륙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충분한 자본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계 기업과 대만·홍콩 자본들은 여전히 투자환경이 양호한 동남부 연안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1,5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환해야 할 외채가 1,518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이 중장기 외채이지만, 연간 상환해야 할 외채가 3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금융 부문이 취약하다는 점도 중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고 중국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하더라도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비해 훨씬 낙후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2010년 이후에도 중국의 국내생산 총액이 미국의 1/3 정도에 불과하여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할 전망이다.<sup>62)</sup>

#### 나. 군사력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군사력도 급속하게 증강될 것인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개혁·개방기 중국은 국방건설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나, 국방 현대화는 4개 현대화 중 맨 마지막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만 킬로미터의 변경선과 1만 8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상 국경선을 지키기 위해 세계에서 가

62)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에 재임하고 있는 양청취(楊成緒)는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불과하고, 10년 후에는 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當前國際形勢六大趨勢,” 『瞭望』, 2000年 第8期 (2000. 2), p. 55.

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군사 무기·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2000년도 중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1,205억 위엔(약 146억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이 연간 지출하는 국방비가 2,5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극히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중 중국의 국방비는 4.5%에 불과하고, 미국이 지출하는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sup>63)</sup> 또한 중국의 국방예산은 대부분 군 병력의 생활비와 활동유지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31% 정도만이 무기·장비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64)</sup> 중국의 국방비가 국내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에 불과하고, 국방비 지출규모가 총 재정 지출 중에서 점유하는 비중도 8.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로 지출하는 국방비는 중국정부가 공개하는 액수보다 3~4배 정도 많은 500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국방예산과 맞먹는 규모이다.

중국은 1985년 이래 병력의 수를 감축하는 대신 병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군사정책을 전환함으로써 군 병력이 대폭 감축되었다. 1980년대 중국은 10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였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 동안에도 50만 명의 병력을 축소함으로써 현재 중국은 2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sup>65)</sup> 중국의 주장처럼, 세계에서

63) Gerald Segal, "Does China Matter?" *Foreign Affairs*, Vol. 78, No. 5 (September/October 1999), p. 29. 중국은 2000년 10월 16일 세번째 국방백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의 5%, 일본의 4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年中國的國防," [www.xinhuanet.com/mil/htm/20001016/170434.htm](http://www.xinhuanet.com/mil/htm/20001016/170434.htm).

64)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國防," 『新華月報』, 1998年 第12期 (1998. 12), p. 172.

65) 1997년부터 중국은 5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였는데, 이 중 육군 병력은

가장 많은 나라와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군사 장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무기 수준이 미·러 등 일류 군사 강대국에 비해 20~30년 정도 낙후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해군과 공군의 원거리 투사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무기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왔으나, 중국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는 노후화 되어 있어서 현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잠수함 71척, 구축함 18척, 프리깃함 35척을 운용하고 있으나,<sup>66)</sup> 신형 구축함과 프리깃함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통신·전자장비 및 항해거리와 속도의 제한으로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5,300여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종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기술에 의해 제작·개량된 것들이다. 최근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H-7기는 수호이 24기와 동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격적인 생산·배치는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체 기술을 통해 군사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러시아로부터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수호이 27 전투기, 수호이 30 전폭기 그리고 R-60, R-77, SS-N-22 등 최신예 미사일을 도입하여 공군력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러시아와 전투기용 조기경보 레이더 공동 연구·개발에 착수하였고, 사이버전 기술 공동연구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67)</sup>

19%, 해군은 11.6%, 공군은 11% 감축하였다.

66)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87.

67)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기수입국으로 1990년대 이래 70억 달러 이상의 최신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구매하였으며, 최신 무기기술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스라엘이 대중 조기경보기 판매계획

세계 5대 핵 전력 보유국인 중국은 지상발사 미사일, 폭격기, 핵잠수함 등에 400여 개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으나,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에 비해 양적으로나 정확도에서 훨씬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과 탄두의 경량화 그리고 고체원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탄의 사거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sup>68)</sup>

또한 중국은 현재까지 원거리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항공모함과 공중조기경보통제체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공중급유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다.<sup>69)</sup> 육·해·공 합동작전 수행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미 국방부의 『중국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경에야 비로소 중국은 신형 전투기, 크루즈 미사일, 최신예 구축함 그리고 공중급유, 조기경보, 전자전 수행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sup>70)</sup>

#### 다. 정치체제와 대외환경

중국의 발전은 중국내 정치·사회 안정 여부와 주변환경에 의해서

---

을 취소한 후 러시아와 A-50 또는 A-50U 조기경보기 구매계약 체결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文匯報』, 2000. 7. 19.

68) 1999년 8월 중국은 사거리 8,000 킬로미터의 ‘동평31’ 대륙간 탄도탄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1999년 11월에는 세계 3번째로 무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였다. 중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과정에 대한 중국측 자료는 “中國新導彈防衛力增強,” 『文匯報』, 1999. 9. 15.

69) 2000년 중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조기경보기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여 러시아로부터 조기 경보기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2000년 11월 카시아노프 러시아 총리 방중시 A-50 조기경보기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www.chinatimes.com.tw/news/cna/761215r.htm](http://www.chinatimes.com.tw/news/cna/761215r.htm).

70) “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defenselink.mil/news/jun2000/china06222000.htm](http://www.defenselink.mil/news/jun2000/china06222000.htm).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력이양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중국국민들은 체제내 정치개혁에 만족할 것인가,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시장화 개혁 진전에 따른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계속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21세기 초 중국의 정치권력은 장쩌민 등 제3세대 정치엘리트로부터 후진타오(胡錦濤)와 원자바오(溫家寶) 등 제4세대 정치엘리트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쩌민과 주룽지(朱鎔基)의 연령과 당강 및 헌법규정에 의거할 때, 2002년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16차 당대회와 2003년 10기 전인대에서 현 지도부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후진타오는 1992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하였고, 현재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국가부주석 그리고 중앙 당학교 교장으로 서 조직, 인사, 이념문제 등을 주관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권력 이양작업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은 청장년기에 문화대혁명기를 경험하고 개혁·개방기에 중앙 정치무대에 발탁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4세대 지도체제 하에서 중국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는 큰 혼란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사회가 다원화하게 되면 정치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지만, 중국국민들은 촌민자치제 확대와 전인대 개혁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 조치에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sup>71)</sup> 중국은 부단히 공산

71) 중국은 1987년 이래 농촌지역의 말단 행정단위인 촌에 대해 시험적으로 허용해 온 촌민자치제를 현급 단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일부 현에서는 현장과 현 인민대표 직접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Kevin J. O'Brien, Liangjiang Li, "Accommodating Democracy in a One-Party State: Introducing Village Elections in China," *China*

당의 체질개혁과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6,300만 명의 공산당원들을 중국사회의 핵심 세력으로 활용하면서 중국의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중국은 2003년 10기 전인대를 전후하여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형태로 국가체제를 개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72)</sup> 이렇게 될 경우, 중·미간 이념적 갈등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파룬궁(法輪功)과 같은 기공단체가 두통거리가 되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공산당에 대한 강력하고 조직적인 도전이 제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장쩌민 이후의 중국 지도부가 개혁·개방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도 중국의 발전을 가늠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양산되고 있는 실업자문제, 지역간 빈부격차 확대문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지지도 약화 및 부정부패 확산 등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정책과 정치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999년 불법단체로 규정된 파룬궁 추종자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사회보장 확충이 필요하다.

중국은 국제질서가 다극화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고, 평화와 안정이 현 국제질서의 주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패

---

*Quarterly*, No. 162 (June 2000), pp. 465~489; Tyrene White, "Village Elections: Democracy from the Bottom Up?" *Current History*, Vol. 97, No. 620 (September 1998), pp. 263~267; 文萍, "村民自治從這里發端," 『瞭望』, 1999年 第41期 (1999. 10), pp. 29~30; [www.xinhua.org/ggkf/06/9811291245291.htm](http://www.xinhua.org/ggkf/06/9811291245291.htm).

72) 2000년 11월 7일 통일연구원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서울대학의 정재호 교수는 웨이젠싱(尉健行)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유럽국가들을 방문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의 정치체제를 둘러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권적 지위가 21세기 초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 등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제와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국력 경쟁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경제발전에 매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 인도 및 동남아국가연합 등과의 선린우호관계 증진으로 중국의 안보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73)</sup>

다만, 중국은 향후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과 주변국들이 제기할 수 있는 ‘중국위협론’과 미·일동맹 강화 그리고 TMD 구축 등이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74)</sup> 대만문제 해결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미국과의 갈등도 중국이 직면할 수 있는 중대한 안보문제가 될 것이다.

## 2. 중·미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정책

### 가. 중국

중국은 미국이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미국과 협력해야만 안정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연간 900억 달러를 넘는 무역

73)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중국의 기본 시각은 元成章, 王堅紅, 『當前國際環境與中國對外戰略,方針,政策』, (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00), pp. 9~188 참조.

74) 李琮, “對世界格局多極化的幾種豫測,” 『瞭望』, 2000年 第21期 (2000. 5), 14-16; 林利民, “未來十年周邊安保環境的變化,” 『瞭望』, 2000年 第21期, 17~19; 張蘊嶺, “中國安全環境觀察,” 『瞭望』, 2000年 第14期 (2000. 4), pp. 24~26.

거래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교역에서 6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 중국 수출 총액의 30% 정도가 미국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또한 미국은 세계은행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중국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개발에 요구되는 투자를 유치하고, 1987년 이래 가입을 추진해온 WTO(GATT)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지지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부 국내 유치기업과 농업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1999년 11월 미국과 시장개방에 관한 양자협상을 타결지었던 것이다.

반면, 중국은 군사안보 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소련붕괴 이후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2000년 북경올림픽 개최 신청에 반대하고, 21세기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유교문명권 간의 ‘문명충돌론’을 제기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TMD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대만문제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위협론’은 과장된 것이며,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을 이중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미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은 미국에 대해 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주권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도 불사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여 중진 경제국 수준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유일 패권국인 미국과 대결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997년 사망한 덩샤오핑도 경제

발전을 중국의 최우선적인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100년 동안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sup>75)</sup> 중국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발전에 두고, 상호의존을 강조하고, 협력안보 개념을 중시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국가 간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에 의해 운영된다는 고전적인 세력균형론을 신봉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상호의존론에 점차 익숙해 가고 있다.<sup>76)</sup>

중국은 중동지역과 한반도 등 잠재적 분쟁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 왔고, 핵확산방지조약, 화학무기금지조약, 핵실험 전면 금지조약 등에 가입하였으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준수를 약속하였다. 또한 중국은 군사정책의 투명화를 기하기 위해 1995년, 1998년 그리고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국방백서를 발간하였다. 1998년 클린턴의 방중 시에는 미국과 생물무기조약에 관한 공동성명, 남아시아문제에 대한 공동성명, 인명살상용 지뢰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상대방에 대해 전략핵무기를 겨냥하지 않기로 한다고 결정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sup>77)</sup>

1999년 5월 미국을 주축으로 한 나토가 유고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한 후,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안보대화를 취소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였으나, WTO 가입 양자협상 타결과 미국의 대중 배상 약속 이후 안보대화를 재개하고 있다. 2000년 쑹광카이(熊光楷) 중국군 부총

75) 鄧小平, “在武昌,深圳,珠海,上海等地的談話要點,” 『鄧小平文選』,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 370~371.

7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Yong Deng, "The Chinese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hina Quarterly*, No. 154 (June 1998), pp. 308~329; 신상진, “중국의 대외관계연구,” pp. 205~212 참조.

77) 『文匯報』, 1998. 6. 28.

참모장과 스윈성 중국 해군사령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군지도부와 접촉하였으며, 미국과 군축·핵비확산협상 등 군사안보대화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인도, 동남아국가연합 등과의 전략 협력 및 선린우호관계를 모색·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질서를 미국이 독단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다극화 질서 구축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더욱 강화되어 미국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감소하게 된다면, 중국은 대만문제와 인권문제 등 일부 주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2050년경까지 현대화 건설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여, 미국에 대해 대체로 타협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나. 미국

미국은 안보력 강화, 경제적 번영 유지 그리고 해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3대 국가안보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인식과 정책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전략목표에 의거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차기 미 행정부도 이러한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내 현실주의자들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과 이라크 등 중동지역 국가들에게 대량살상무기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군비통제와 확산방지를 위협하고 있고, 향후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동아시아 지역국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국 중심의 아시아를 건설하려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 합참은 향후 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중·미관계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영국과 독일간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비유하면서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sup>78)</sup>

또한 세계무대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상과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서 종교박해와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다소 향상되었으나, 티벳에 대한 종교 탄압이 지속되고 있고, 천안문사건 시위자 등 반체제 인사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등 중국에서 정치적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초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중국에서 인권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중요한 경제교류·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4대 교역국으로서 미국 국민들에게 저렴한 상품을 공급해 주고 있고, 항공기와 농산물 등 상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나아가 중국은 12억 인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을 경시하기 어렵다. 미국은 개방된 무역체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교류·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

78) Edward Friedman, "The Challenge of a Rising China: Another Germany?" Robert J. Lieber, ed., *Eagle Adrift: American Foreign Policy at the End of the Century* (New York: Longman, 1997), p. 219; [www.washingtonpost.com/wp-dyn/world/asia/A7981-2000May25.html](http://www.washingtonpost.com/wp-dyn/world/asia/A7981-2000May25.html).

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안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을 협력상대인 동시에 잠재적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 인식에 따라, 미국 내에서 대중정책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과 상이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면 지역안정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에 대해 견제정책 또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취하여 중국의 부상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9)</sup> 이들은 중국과의 대외무역과 대중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의 군사 무기 개발에 전용될 위험이 있는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중국을 경쟁국으로 간주하는 논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한다.

반면, 미국의 많은 인사들은 중국이 외부 세계와의 상호의존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정면 도전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발전된 중국이 낙후된 중국보다는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고, 중국의 군사비 지출도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건설적 개입 정책’(constructive engagement policy)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 미래 중국이 미국에게 위협적인 국

79) 이러한 논지를 주장하는 글로서는 Charles Krauthammer, “Why We Contain China,” *Time*, July 31, 1995, p. 72; Jim Mann, “US Starting to View China as a Potential Enemy,” *Los Angeles Times*, April 16, 1995; Paul Dibb, “Towards a New Balance of Power in Asia,” *Adelphi Paper*, No. 295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May 1995); Gerald Segal, “East Asia and the Constraint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4 (Spring 1996), pp. 107~135 등이 있다.

가가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을 적대국 또는 경쟁국으로 상대하게 되면, 중국이 실제로 미국의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80)</sup>

이들 극단적인 대중정책은 비현실적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두 가지의 정책을 절충하는 형태의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랜드(RAND) 연구소는 이를 ‘봉쇄-개입정책’(congaement policy)으로 지칭하고, 중국에 대해 개입정책을 지속하되 인권문제와 종교박해문제 및 무기수출문제 등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력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과 정치·군사관계를 강화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sup>81)</sup>

### 3. 중·미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중국이 국력을 증강해 나감에 따라 중·미관계는 협력보다 경쟁적인 면이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중·미는 1950~60년대와 같은 공개적인 대립을 벌이지는 않고 있다. 중·미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과 지속시키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80) 이러한 주장은 Gary Klintworth, "Greater China and Regional Securit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8, No. 2 (November 1994), pp. 211~219; Chas. W. Freeman, Jr., "Sino-American Relations: Back to Basics," *Foreign Policy*, No. 104 (Fall 1996), pp. 3~17; Kenneth Lieberthal, "A New China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6 (November/December 1995), pp. 35~49; Joseph S. Nye, "China's Re-emergence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pp. 74~77 등 참조.

81) Zalmay M. Kb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 Rising China: Strategic and Military Implications* (Santa Monica, Calif.: RAND, 1999), pp. 72~75.

다. 경제교류·협력 확대와 한반도와 같은 분쟁 예상지역의 안정유지를 둘러싸고 중·미는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대만문제, 미국과 역내국가 간의 동맹관계, 중국내 인권문제 및 경제·통상마찰 등은 중·미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우선 이들 중·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분석·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미관계의 모습을 전망하기로 한다.

### 가. 중·미 협력요인

경제발전을 최고 국가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에 정면 도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과 연간 900억 달러가 넘는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부지역 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외자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더 확대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대외교역에서 미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미국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중단하거나 중국상품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은 심각한 타격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경제기구로부터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1999년 11월 중국은 미국과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타결하면서 그 동안 국내 유치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금융·보험시장과 자동차와 서비스 시장 등을 개방하기로 하였다.<sup>82)</sup> 중국정부가 중국의 경제주권이 자본주의국가에 “약

82) “美中雙邊WTO協議概要,” [www.chinabulletin.com/luntan/wto/gaiyao.gb](http://www.chinabulletin.com/luntan/wto/gaiyao.gb).

탈당할 수 있다”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sup>83)</sup>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의 지지 없이 1986년 이래 추진해 온 세계무역기구 가입 노력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정상무역관계(NTR)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파견하여 무역역조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sup>84)</sup> 일부 반체제 인사를 석방하는 등 대미 타협자세를 취해왔다. 더욱이 2000년에는 미국 의회가 중국에 대해 ‘영구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할지 여부를 심의하였는데,<sup>85)</sup> 이 과정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협력자세를 보였다. 1999년 악화되었던 중·미관계가 2000년 들어 완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영구정상무역관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미 협력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2050년까지 경제건설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미정책을 협력지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역시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안보적 이유로 중국과 갈등을 벌이면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의 중요한 수입국이며, 미국의 금융·보험업과 자동차업계 등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시장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이

83) 이러한 반대입장이 잘 나타난 저서로는 韓德強, 『碰撞—全球化陷阱與中國現實選擇』(北京: 經濟管理出版社, 2000); 楊斌, 『威脅中國的隱蔽戰爭—美國隱蔽經濟戰與改革陷阱』(北京: 經濟管理出版社, 2000) 참조.

84) 미국은 ‘최혜국대우’(MFN)로 지칭해 왔으나, 1998년 7월부터 이를 ‘정상무역관계’(NTR)로 고쳐 부르고 있다.

85) 미 하원과 상원은 각각 5월과 9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클린턴 대통령은 10월 10일 이 법안에 정식 서명하였다.

시장경제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어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대중 개입정책 지지자들은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중국내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 중국과 안보협력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1999년 2월 마케도니아 주재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둔시한 연장 결의안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이 추구하였던 발칸반도지역의 안정유지 정책에 타격을 가하였던 경험이 있는 바,<sup>86)</sup> 미국은 세계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이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해 핵과 미사일기술 수출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를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에너지 사용량이 전 세계 에너지 소모량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많다. 중국이 서부지역으로까지 개발을 확대하는 등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지구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sup>87)</sup> 따라서 1998년 6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86) 중국이 마케도니아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시한 연장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케도니아가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기 때문이었다. 『人民日報』, 1999. 2. 27.

87) 중국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胡鞍鋼, “中國改革中所面臨的人類發展的重大挑戰,” 『中國走向』, pp. 38~48; 錢俊生, 駱建華, 『環境,資源,人口與持續發展』 (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00), pp. 108~160

때에도 미국은 중국에게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려 있다.

#### 나. 중·미 갈등요인

1979년 수교 이래 대만문제가 중·미관계 진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앞으로도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간에 심각한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내정문제로 간주하면서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거나 대만문제에 대해 외부세력이 개입할 경우 그리고 대만이 중국과의 평화통일을 무기한 거부할 경우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sup>88)</sup> 대만독립을 주장해 온 민진당이 집권한 후 중국은 대만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군사·경제·외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대만주권 수호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내부 단결을 모색하고 있고,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대만을 압박하고,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대만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외교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1979년 대만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으로 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의거, 미국은 대만에 군사무기를 제

참조.

88) 중국은 2000년 2월 대만 10대 총통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문제」 제하의 백서를 통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외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경우 그리고 대만당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무기한 지연시킬 경우 무력사용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國務院新聞辦公室, “一個中國的原則與臺灣問題,” 『新華月報』, 2000年 第3期 (2000. 3), pp. 144~148.

공해 왔다. 1982년 8월 중국과 체결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합의하였으나,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을 저지하고 대만의 자체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F-16 전투기, 패트리어트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조기경보체제 등 첨단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2000년 2월 미국 하원은 「대만안보강화법안」을 통과시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sup>89)</sup> 친대만 성향의 미 의원들이 미 행정부에 대만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대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1998년 이래 미국의 TMD 구축을 둘러싸고 중·미 사이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미국이 대만까지 TMD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이 TMD체제에 포함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대만간 새로운 형태의 군사동맹을 의미하게 되고, 대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위협수단이 약화되어 대만에서 독립운동을 부추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sup>90)</sup>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TMD와 N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을 개정·폐기하려는 데 대해서도 러시아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며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만해협에서 현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sup>91)</sup> 대만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정책’은 대만해협의 안정을 유지

89) 미 상원과 행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중관계를 악화시키고 대만해협 안정에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90) 閻學通, “戰區導彈防禦系統與東北亞安全,” 『中國評論』, 總第30期 (2000. 6), pp. 90~92.

91) Zbigniew Brzezinski, “Living with China,” The National Interest, No.

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을 억제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이는 중·미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대대만 지원정책이 중국 경제·봉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2)</sup>

대만독립을 당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민진당 정부 하에서 대만독립 여론이 강화되고 미국이 TMD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대만에 대한 지원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의 갈등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

미·일동맹 강화 등 21세기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보문제도 중·미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일본과 「신안보협력지침」을 확정하여 ‘일본 주변사태’에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다. 1999년 일본 의회가 자위대법개정안, 주변사태법안 및 미·일 물품용역상호지원협정 등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대폭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자위대가 대만해협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93)</sup> 중국은 나토가 동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는

59 (Spring 2000), pp. 2-16; 신상진, “민진당 집권이후 중·대만관계: 분석과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8), p. 281 참조.

92) 맥클래런(John P. McClaran)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국에 대한 정치적 지렛대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U.S. Arms Sales to Taiwan: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Sino-U.S. Relationship,” *Asian Survey*, Vol. XL, No. 4 (July/August 2000), pp. 623, 634~637.

93) 미·일 동맹강화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이 잘 나타난 글은 張大林, “評日美安全保障聯合宣言,”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4期 (1999. 10), pp. 24~28; 劉江永, “美日重建冷戰後同盟,” 『世界知識』, 1996年 第9期 (1996. 5), pp. 2~5; 唐天日, “揭穿日美防衛合作的本質,” 『瞭望』, 1999年 第18期 (1999. 5), p. 8 등 참조.

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1999년 5월 미국이 국가주권보다 인권이 우선한다는 내용의 ‘나토 신전략 개념’ 아래 유고를 폭격하고 미국 공군기가 유고주재 중국대사관을 공격한 데 대해서도 중국은 패권적 행위라면서 강경하게 비난한 바 있다.<sup>94)</sup>

중국은 미·일동맹 강화와 나토의 동유럽 확대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적 국가전략에 입각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질서를 확고히 장악하여 패권국 지위를 영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세계질서의 다극화와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러시아와 유럽국가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이 ‘나토 신전략 개념’ 아래 국제질서를 독단적으로 지배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제연합의 위상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중국내 인권상황과 종교박해 문제도 중·미 사이에 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확산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은 1989년 천안문사건 이래 중국의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초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인권 결의안 상정을 모색해 왔다.<sup>95)</sup> 미국은 중국이 티벳과 신강자치구의 소수민족을 탄압하

94) 나토 신전략 개념은 나토 영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분쟁이나 테러, 대량 파괴무기 개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행동이 가능하도록 나토의 활동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肖楓, “美全球戰略下的世界走向,” 『人民日報』, 1999. 5. 31, 6. 1; 蔣建清, “北約二十一世紀新戰略及其影響,” 『國際問題研究』, 1999年 第3期 (1999. 7), pp. 15~19; 徐學銀, 朱憲, “評新干涉主義,”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8期 (1999. 8), pp. 19~22.

95)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중국인권문제를 거론하려 하였고, 1990년부터서는 제네바 인권위원회에 중국인권 결의안 상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1995년을 제외하고는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못하였다.

고 있고, 죄수들을 강제노역에 종사하도록 하고, 파룬궁 수련자들을 수감하고, 1998년 중국민주당 설립을 시도한 쉬원리(徐文立) 등 반체제 인사를 장기 투옥시키고 있다면서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티벳인권담당 조정관을 임명하여 티벳인권문제를 환기시키고 있고, 미 의회는 대중 영구정상무역관계법안 처리과정에서 중국내 인권상황과 연계시킬 것을 행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이 국가주권보다 인권이 우선한다면서 나토를 동원하여 유고를 폭격하였던 사실은 중국에게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중국은 2개의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일부 반체제 인사들을 석방하고 촌민자치(村民自治)를 강화함으로써 미국과의 인권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12억이라는 방대한 인구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자유권보다 절실하다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인권압력을 내정간섭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내 인권문제를 중국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화평연변’(和平演變)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sup>96)</sup>

#### 4. 중·미관계 전망: 전략적 경쟁관계

향후 예상되는 중·미관계로 적대국관계, 전략적 협력관계 그리고 현재처럼 사안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면서 경쟁적 측면이 부각되는 상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중·미관계가 적대국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세계

田進, 俞孟嘉, 『中國在聯合國—共同締造更美好的世界』(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9), pp. 215~221.

96) 楚樹龍, 王在邦, “關於國際形勢和我對外戰略若干重大問題的思考,”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8期 (1999. 8), p. 5.

패권을 추구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의 패권질서를 반대하면서 다극화 질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미간 갈등이 장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만에서 독립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대만문제에 대해 중·미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빚게 될 여지가 많다. 이처럼 향후 중·미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주로 중국이 미국과 상이한 가치관과 문화적 전통을 신봉하고 있고 중국이 경제력을 신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sup>97)</sup>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1세기 초에도 중국과 미국이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안보 영역에서도 상호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적대국관계로 악화될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둘째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처럼 중국과 미국이 제3국의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1세기에도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핵무기 확산금지과 서남아시아와 한반도 등지의 안정유지 등에 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미국의 안보를 정면 위협할 세계적 강대국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1970년대 초와 같이 미국이 전반적인 안보문제에 대해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만문제와 미국의 NMD, TMD 연구개발 및 중국내 인권문제 등을

97) Richard Bernstein,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Knopf, 1997); Michael W.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December 1986), pp. 1151~1169.

둘러싼 중·미간의 마찰은 중·미간 전략적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진정한 동반자관계 또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관, 전략적 이익, 정치체제 및 정보공유 등의 문제에서 이해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들 문제에 대해 중·미는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

결국 적어도 향후 10년 정도까지 중·미관계는 현재와 같이 사안에 따라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과 대만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안정 유지를 위해 미국과 협력을 바라게 될 것이며, 미국도 중국을 시장경제체제로 완전히 편입시키고 대만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아·태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 중국과 접촉을 지속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 증강과 대만의 독립여론 심화 가능성 및 TMD와 NMD 구축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미간 협력기반은 현재보다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미가 경쟁을 벌이게 될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미관계는 ‘전략적 경쟁관계’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sup>98)</sup>

‘전략적 경쟁관계’는 본질적으로는 경쟁관계이지만,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사안에 따라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이는 적대국관계와 전략적 협력 또는 동반자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편,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해 온 부시(George W. Bush)가 우여곡절 끝에 차기 미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미국이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중·미관계가 단기적으로 경색될 가능성

98) 중국 국무원 산하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위엔핑은 21세기 중·미관계를 ‘새로운 전략경쟁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袁鵬, “當前中美關係性質趨議,” 『現代國際關係』, 2000年 第9期 (2000. 9), pp. 3~5.

이 있다. 부시 2세 진영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과 안보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만을 미국의 맹방으로 지목하고 「대만관계법」에 의거, 대만에 무기수출을 확대하고 대만의 TMD 가입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이들은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NMD와 TMD계획 지속추진 및 ABM조약 폐기와 CTBT조약 비준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이 부시 진영의 이러한 안보정책 방침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차기 미 대통령하에서 중·미간 안보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전략적 경쟁관계' 하에서 주요 안보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이견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세계질서관의 차이이다. 미국은 '패권안정론'에 입각하여 세계질서 주도권을 유지하려 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패권질서를 반대하면서 다극화 질서 형성을 계속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추진하면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듯이, 중국이 미국의 주도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안보관의 차이이다. 미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동맹관계를 통해 세계질서를 주도하려 하는 반면, 중국은 동맹을 통한 안보는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면서 협력안보를 통해 세계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역설할 것이다. 중국의 국력이 증대될수록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대화를 보다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미국의 동맹을 통한 지역 질서 주도전략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sup>99)</sup>

99) 중국은 중국내 인권문제와 대만문제 그리고 남사군도 영유권문제 등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여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다

셋째, 중·미는 문화적으로도 상이한 가치관을 신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내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을 시장경제체제에 완전히 편입 시킴으로써 중국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촉진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인권압력과 체제변혁 유도정책을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자유권과 발전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둘러싸고 마찰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관행을 고려할 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에도 중국과 미국간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무역역조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1997년과 1998년 중국이 2개의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일부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체제내 정치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 마찰이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sup>100)</sup>

넷째, 주권제한론을 둘러싸고서도 중·미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은 1999년 나토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나토 신전략개념’ 아래 주권 제한론을 주창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하지 않고 주권국가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개인의 인권이 국가주권 보다 상위의 개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유엔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국은 미국이 ‘나토 신전략개념’을 대만해협사태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안정 유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이러한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

---

자안보대화(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중국위협인식을 완화하고 미국의 동맹외교 전략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楚樹龍, “冷戰後中美雙邊和地區戰略與安全關係,” pp. 9~10.

100) 중국은 대내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정치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에 대해서는 이견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중·미 사이에는 세계질서 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입장이 상이하게 표출될 것이다.

## IV. 21세기초 중·미관계와 한반도

중·미관계는 동북아질서에 가장 핵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자 관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중·미관계가 ‘전략적 경쟁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예상되는 동북아질서의 모습을 예측하고, 중·미관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 1. 중·미간 경쟁과 동북아질서

#### 가. 미·일동맹

미국은 역내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지역질서를 주도하려 하고 있고, 일본은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파장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미간 경쟁적 측면이 부각될수록 미·일은 안보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1995년과 1996년 대만해협에서 위기국면이 조성된 후 미·일이 신안보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신안보협력지침을 확정하는 등 동맹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동맹관계를 지속·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위협을 단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병참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1997년 미·일 신안보협력지침에서 ‘일본주변사태’의 범위를 규정하고, 1999년 「자위대법개정안」, 「일본주변사태법」, 「미·일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 등 미·일 신안보협력지침 관련법안이 일본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되었다. 미국은 주일 미군의 역할

을 일본 본토의 안보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사태 등 지역안정유지 세력으로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다.

21세기 중국과 더불어 지역질서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갈등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 일본은 대만해협사태에 따른 안보적 과장을 고려하여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TMD체제를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미·일동맹관계 하에서 이는 대만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석유를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대만해협사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경험한 지역국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역할 증대를 모색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 나. 중·일경쟁

과거사문제, 군사력 증강문제, 일본의 TMD 참여 및 역내 역할증대 등을 둘러싸고 중·일간 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시하라 동경 지사와 같은 보수세력들이 건재하고 있고,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중국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대내 통합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98년 11월 장쩌민의 일본방문 시에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사문제가 중·일 사이에 동반자관계 구축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상대방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신방위계획대강을 채택하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 중국은 일본이 전수방

위정책을 포기하고 지역방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심지어 일본이 군국주의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경제력을 신장하게 되면 필연코 군사력을 증강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위협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일본이 미국과 TMD를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합의한 후 중·일간 군사안보적 이해대립이 표면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더욱 신장되고 대만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미관계가 갈등을 보이게 될 경우, 중·일이 공통의 안보이해를 찾기가 더 어렵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주일미군과 미·일동맹에 대해 더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일본은 대중 엔차관을 환경오염 방지와 인재양성 분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완화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일·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으나, 향후 북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경계할 것이다. 중국은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6자회담 구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 경쟁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를 기지로 활용하여 상대방을 침공하였던 사실이 말해 주듯이,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안보적으로 극히 중요한 전략요충지라는 점에서 그렇다.

#### 다. 중·러협력

미국에 의한 단극질서 형성을 반대하고 다극화 질서 구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중·러간 안보협력관계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동맹 강화, 나토의 동유럽 확대 및 NMD와 TMD 구축 문제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군사적 조치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sup>101)</sup> 특히 중·미간 경쟁적 측면이 부각될 경우,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중·러간 안보협력은 이미 정례화된 상하이 5개국회의, 비공식 지도자회의, 총리 정례회의 및 군사무기 판매 등을 통해 강화될 전망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리를 강조하는 지도자라는 점에서, 중국이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제 무기구입정책을 지속하는 한 중·러간 안보적 협력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가 대내 문제들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지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일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라. 대만해협 긴장

중·대만 간에는 연간 25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거래와 200만 명이 넘는 인적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1995년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미국방문과 1996년 대만총통선거를 전후하여 중국이 대만의 2개 항구 인근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만의 독립여론을 잠재우려 하였고, 이에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해협 인근에 파견되어 중국과 미국 군대가 대만해협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조성된 바 있다. 1999년에는 리덩후이 총통이 독일 방송과의

101) 馮玉軍, “對中俄戰略協作伙伴關係的再思考,” 『現代國際關係』, 1998年第8期 (1998. 8), pp. 2~6.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를 “특수한 국가 대 국가간의 관계”(양국론)라고 주장하자,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정치·군사·외교 등 전 방위에 걸친 압력을 가함으로써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2000년 대만총통선거를 전후해서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위협 의지를 담은 「통일백서」를 발표하여 대만에 압력을 가하고, 대만에서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이 총통에 당선됨으로써 양안간 군사적 긴장국면이 재연되었다.

천수이벤은 총통에 당선된 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책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뤼슈롄(呂秀蓮) 부총통은 노골적으로 대만의 유엔가입을 주장하고 독립노선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중국으로부터 강경한 대응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부도 군부와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 주권문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 대만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해협의 긴장은 곧바로 중·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1세기에도 대만문제는 중·미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에서 중·미간 경쟁이 심화되면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TMD 연구개발과 미·일동맹 강화 등으로 중·미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중국이 미·일의 TMD 연구개발과 동맹강화 조치들을 미·일이 대만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전략구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02)</sup>

102) 閻學通, “戰區導彈防禦系統與東北亞安全,” pp. 90~92.

## 2. 중·미간 경쟁과 한반도

### 가. 중·미의 한반도정책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중·미관계에서 경쟁적 측면이 확대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중·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미는 한반도에서 각기 영향력 확대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중·미의 외교정책은 더 적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만의 안보를 강화하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TMD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데, 중·미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게도 TMD체제 참여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특히 대북 접근정책을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계할 것이다. 대미관계에서 갈등요인이 부각될수록 중국은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이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이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남북한에 대해 외교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내에 붙잡아 두려 할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안보접촉을 확대하여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체제의 구심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처럼 중·미가 한반도에서 경쟁과 이해대립을 보이게 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거처럼 한반도의 안정유지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양국이 반드시 협력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중·미의 입장과 정책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략적 경쟁관계' 하에서도 중·미 양국은 여전히 경제분야 및 한반도 등 지역안정문제 등에서 협력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중·미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면에서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 나.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에 미칠 영향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거나 위협을 가할 것으로 인식할 경우, 미국은 한·미, 미·일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유지 그리고 TMD체제 구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43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부시 2세가 대선 과정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국은 한·일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TMD와 NMD 구축 구상을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외교안보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대만에 대해 군사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안보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미·일동맹과 TMD체제를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sup>103)</sup>

103)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pp. 45~62; Robert B. Zoellik,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pp. 63~78.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정책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지역안정 유지 기능도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역내 미군 주둔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만을 밝혀 왔으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지역안정 유지 기능보다는 중국견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입장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해 중국이 느끼는 위협도 증대될 것이다. 공개 국방예산이 중국보다 많은 한·미·일 3국이 군사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중국은 안보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중국은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중국 포위망’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안보공조체제가 강화될 경우, 한·미·일 3국이 대만해협사태에도 개입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반대하면서, 한·미·일간의 ‘합중전략’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과 안보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 러시아와의 안보협력 확대라는 ‘연횡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미·일 공조체제가 냉전시기의 동맹을 통한 안보조치라고 비난하고, 중·러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5국간의 ‘상하이 5국회의’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국간 협력대화를 역설하게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중국은 정부차원의 구속력을 가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의 종합국력이 신장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중국은 미국의 동맹을 통한 역내 주도권 장악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다자안보 대화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역국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

고 있는 안보위협 인식을 완화하고 지역안정 유지자로서 중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sup>104)</sup>

미국이 NMD와 TMD체제 구축노력을 지속하게 될 경우, 중국은 이를 중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NMD와 TMD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통일을 저지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동아시아 안보전략의 중요한 기지로 간주하고 대만에 대해 이미 패트리어트미사일과 조기경보레이다 등 TMD의 일부를 구성하는 무기를 제공한 사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대만을 TMD계획에 참여시키려는 것은 미국과 대만간의 새로운 형태의 군사동맹을 결성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105)</sup> 이러한 인식 하에 중국은 한국정부가 TMD계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MD와 TMD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sup>106)</sup> 중·미간 안보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 하에서 한

104) 다자안보대화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Hongying Wa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 XL, No. 3 (May/June 2000), pp. 475~491; "錢其琛就亞太形勢闡述我觀點和立場," 『人民日報』, 1997. 7. 28; 時永明, "亞太安全中的矛盾與合作," 『國際問題研究』, 1997年 第3期 (1997. 7), pp. 44~49; 丁奎松, "亞太大國關係對地區安全合作的影響," 『現代國際關係』, 2000年 第1-2期 (2000. 2), pp. 88~90 등 참조.

105) 韓輝, "美國發展和部署反導武器的意圖與影響," 『瞭望』, 2000年 第25期 (2000. 6), p. 56; 閻學通, "戰區導彈防禦系統與東北亞安全," 『中國評論』, 總第30期 (2000. 6), pp. 90~91; 신상진, "미국의 NMD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國際問題』 (2000. 11), pp. 34~42.

106) 2000년 중국 국무원 현대국제관계연구소에서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로 전직한 옌취에통 상임부소장은 한국이 미국의 TMD계획에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閻學通, "戰區導彈防禦系統與東北亞安全," p. 88.

국이 미국의 TMD 참여 압력을 계속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TMD문제를 둘러싸고 중·미, 한·미 및 한·중간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간 군사동맹관계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중·북은 동·서 냉전체제가 지속되었던 1961년 7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조약 2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1개 국가 또는 수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한·미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중국은 자동으로 한반도사태에 개입하게 되어 있다.

물론 중·미간 안보적 경쟁관계가 조성될 경우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가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며,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유대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북한 역시 1960년대 중·소경쟁시기 등거리정책을 통해 중·소로부터 많은 지원을 확보하였던 것처럼 중·미간 경쟁속에서 중국과 안보적 협력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유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2000년 10월 미국 올브라이크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미·북관계 개선문제를 논의하였던 바로 그 시점에 츠하오텐 중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한국전 참전 5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하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을 갖고 군사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중·북이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07)</sup>

107) 츠하오텐 중국 국방부장 겸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은 10월 22~26일 승팡카이 부총참모장, 치엔궈량 선양군구 사령관, 천뺑더 지난군구 사령관 등 대표단을 대동하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金正日會見遲浩田,”

그러나 대내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개방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부담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북한이 한·미에 대해 ‘자살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한·미·일과 적대적 대립관계로 빠져들게 됨으로써 국가발전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세계 어떤 나라와도 동맹관계에 있지 않고 동맹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도 의미있는 대목이다.<sup>108)</sup> 북한 역시 “반사회주의 노선을 신봉하는” 중국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정책보다는 다원화된 외교를 추구할 것이다.<sup>109)</sup>

결국 중·미관계가 전략적 경쟁관계로 변화되더라도, 중국이 북한과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냉전시기와 같은 중·북·러시아간 북방 3각관계가 복원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중·북한이 군사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

한·중간 경제교류·협력 진전추세는 지속될 것이나, 정치·군사분야에 있어서는 한·중관계가 복잡 미묘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1994년과 1999년의 경우처럼 한·중간 정치·안보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미관계에서 경쟁적 측면이 부각될

『文匯報』, 2000. 10. 26.

108) 元成章, 王堅紅, 『當前國際環境與中國對外戰略, 方針, 政策』, pp. 228~229; 劉華秋, “指導新時期對外工作的強大思想武器,” 『人民日報』, 2000. 7. 13.

109)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기관지 『로동신문』을 통해 중국의 경제만능주의적 정책을 반사회주의 노선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는 중·북관계가 더 이상 이념적 공통성이 기반한 동맹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 11. 4.

경우, 미국은 한·일과 안보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한·중 안보관계 강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공감하면서 4자회담 구도를 지지할 것이다. 현재 중·미는 4자회담 틀 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거의 이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4자회담이 참가국 전원 합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4자회담을 적극 지지해 왔다.<sup>110)</sup> 주룽지 총리는 2000년 10월과 11월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시 4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지지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4자회담 재개 지지입장은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을 통해서도 공식 확인되었다.<sup>111)</sup>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게 되면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부담이 줄어들고 주한미군 철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 하에 4자회담 재개에 적극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12)</sup>

그러나 중·미간의 안보적 갈등이 부각되게 되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구상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1996년 4자회담 제의 초기 중국이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1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참조.

111) 『중앙일보』, 2000. 10. 22. 중국 베이징대학의 천평권 교수는 미·북관계 개선을 중국은 불리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북관계 개선으로 4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앙일보』, 2000. 10. 16.

112) 우따웨이 주한 중국대사는 2000년 11월 16일 언론재단이 주최하고 필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조찬강연회에서 필자가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미국이 주한미군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천명하였다.

인 태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113)</sup> 또한 4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중·미간에 쉽게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남북한간 교류협력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2010년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미의 입장은 중·미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 그리고 중·일관계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견해와 정책방향을 좌우하게 될 핵심 변수는 중·미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sup>114)</sup>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안보적 경쟁이 부각될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고 한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지속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한·미 군사동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한국에 의해 통일된다면 자국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로 남기를 바라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현상변화를

113) 중국은 한반도 4자회담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안정을 도모하려는 다자안보대화체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이 이를 주도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紫尙金, “亮点, 热点, 阴影—上半年我國周邊安全形勢回顧,” 『瞭望』, 2000年 第27期 (2000. 7), p. 57; Hongying Wa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 XL, No. 3 (May/June 2000), pp. 482~484 등 참조.

114) 왕페이링은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인지는 중·미관계, 중·일관계 그리고 통일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Fei-Ling Wang, “Joining the Major Powers for the Status Quo: China’s Views and Policy on Korean Reunification,” *Pacific Affairs*, Vol. 72, No. 2 (Summer 1999), pp. 170, 182~185.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동북아 역할증대를 둘러싸고 중·일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국은 통일한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강력한 국가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sup>115)</sup> 통일한국이 중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중국이 통일한국을 이용하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모험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미, 중·일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중국이 ‘남북간 자주적·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다.

---

115) 한반도와 동북아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전략가들은 통일한국이 일본보다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V. 한국의 대중·미정책 방향

### 1.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향후 중·미간에는 협력요인보다는 갈등요인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중·미간 갈등의 범위와 폭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보를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고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게 중·미관계 악화는 심각한 선택을 강요하게 할 것이다. 21세기초 중·미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1세기 중반까지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극화가 진행되는 ‘일초다강’의 질서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다원화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지렛대를 가질 수 있고,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미, 중·일간 예상되는 군사적 갈등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은 지역안정유지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상군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군과 해군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지상군 최소화는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사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사태에까지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중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고,<sup>116)</sup> 이는 결국 중·미간 갈등구조가 한반도에 직접 파급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러시아와도 정치·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중국과 정치·군사적 신뢰를 확대함으로써 대북 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안보협력 확대는 한국의 안보부담을 완화하고, 동북아에서 남북한간 및 중·미, 중·일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 러시아와도 지속적으로 군사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러와 안보교류·협력을 모색하면서 미국에 대해 충분한 사전 양해와 사후 통보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새로운 친구를 얻기 위해 한국의 정치·경제·안보에 가장 핵심적인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 손상을 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중·미간 갈등이 부각될수록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은 중·미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 수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이 강대국간 갈등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간 이해대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중·미 협력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TMD 구축문제와 대

116)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대만문제 등 중국 내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楚樹龍, “冷戰後中美雙邊和地區戰略與安全關係,” pp. 9~10.

만문제로 인한 중·미간 갈등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TMD체제 불가입 입장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다자안보대화체를 활용해야 한다. 지역 다자안보대화는 중·미갈등을 완화하고 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미간 충돌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메카니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도 미국, 중국, 북한 등이 정부가 주도하는 동북아지역 다자안보대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다자안보대화는 역내 분쟁발발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히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주도 가능성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이 주도하여 제의할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 2. 대미정책

향후 상당기간동안 동북아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일초다강’의 국제질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 있게 대외 및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부시 차기 미 행

정부가 대북 강경성향의 정책을 채택하고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게 될 가능성도 예상되는 바, 한국은 미국 조야에 햇볕정책의 실체와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북한에게는 대미 타협정책 필요성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이견이 분출되지 않도록 대미·대북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2001년 미국에서 신 행정부가 구성되고 대외정책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군부 내 친한파 인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부시가 동북아 및 해외방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 한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부시의 이해와 관심을 넓히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 한국방문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기 미 행정부시기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의회와 관료 및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차기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sup>117)</sup> 한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 및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주한미군의 대만해협사태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중국견제 메카니즘으로 보고 있는 바,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만해협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공조체제도 한반도문제에 국한시켜야 한다. 즉, 중·미관계와 중·일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조정

117) 덕 체니 차기 미 부통령 당선자는 1980년대말 국방장관 재임시기 주한미군의 단계별 철수계획안을 발표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차기 미 행정부 하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콜린 파월도 해외주둔 미군을 전면 재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3. 대중정책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정치·군사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중간 안보적 신뢰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 ‘영원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북한의 생존에 절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18)</sup>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없이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우선 중국과 군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군사협력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 군사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미국에게 충분한 사전 양해와 사후 통보조치를 취하여 한·미 동맹체제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체제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한·중간 군사교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중·미관계가 갈등국면으로 발전할수록 중국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은 주한미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한반도의 안정유지 기능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중·미간 안보마찰이 부각될수록 중국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 목적을 가진 세력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대해서도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 봉쇄망’으로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sup>119)</sup> 따라서 한

118) 1961년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동맹조약)은 만료시효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어느 일방이 폐기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

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지역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따름이며 대만해협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과 북한간 군사동맹조약 폐기나 수정을 한국이 중국에 촉구할 경우, 중국은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중·북 군사동맹조약 폐기를 선불리 제기할 필요는 없다. 또한 중·북 군사동맹관계가 한·중관계 발전과 중국의 안보개념 변화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상태라라도 동맹조약을 유지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양자간 군사동맹을 통한 안보를 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조약 제2조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이 발발한 분쟁에 대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선불리 대만과의 정치관계 복원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변화 유도와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이 대만문제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 및 의회 차원, 특히 야당 의원들이 대만 의회와 의원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단교 이후 심각하게 손상된 신뢰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있다.

119) 이러한 입장이 잘 나타난 글은 畢玉蓉, “駐韓美軍爲何賴着不走,” 『解放軍報』, 2000. 7. 10; 于美華, “駐韓美軍爲何賴着不走,” 『瞭望』, 2000年第39期 (2000. 9), p. 62; 左翼青年, “美帝國主義從朝鮮半島滾出去!” [www.chinabulletin.com/luntan/guogi/zouyi.txt](http://www.chinabulletin.com/luntan/guogi/zouyi.txt) 등이 있다.

## VI. 결 론

1990년대 중·미관계 변화과정과 이에 따른 중·미의 한반도정책 변화를 논의하고, 21세기초 중·미관계를 중국의 종합국력 변화, 상대방에 대한 인식, 양국관계에 미치는 주요 사안분석을 통해 전망해 보았다. 아울러 중·미간 안보경쟁이 확대될 경우 동북아질서의 모습과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전망하였다.

연구결과 1990년대 중·미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및 통일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책에도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중·미관계가 다소 긴장관계로 발전하더라도 양국은 한반도 안정유지 문제에 있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방법면에 있어서는 양국 사이에 이견이 나타났다. 미국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유사시 물리적 강제력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중국은 압력수단 사용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중·미관계에서 협력적 측면이 부각될수록 중국이 미·북관계 개선을 묵인하고 지지하는 강도가 강하였다. 중국은 중·미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미·북관계가 개선되면 미국이 북한을 대중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해 1997년 하반기 이후 중국이 적극참여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도 장쩌민의 미국방문 등을 계기로 대만문제로 인해 악화되었던 중·미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중·미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정치·안보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992년 8월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고, 1994년 10월 이후 1995년 상반기 기간동안 중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앞다투어 서울을 방문하고, 1999년 8월 한국 국방부장관의 중국방문 및 2000년 1월 츠하오텐 중국 국방부장의 서울방문이 성사되었던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한·중수교 당시 중·미간에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와 ‘화평연변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배태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하반기 이후 장쩌민 등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치관계 증진을 도모하였는데, 이는 같은해 10월 21일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약속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격상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중·미간에 마찰이 심화되었다. 1999년 8월과 2000년 1월 한·중간에 국방장관 교환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도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건과 미국의 TMD 구축문제 등으로 중·미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또한 21세기초 중·미관계가 현재와 같이 사안에 따라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게 될 것이나, 중국의 국력증강과 대만의 독립여론 심화 가능성 그리고 TMD와 NMD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미간 협력기반은 현재보다 취약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전략적 경쟁관계’로 규정하였다.

부시 차기 미 대통령 하에서 미국이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중·미관계가 단기적으로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부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면서 일본, 한국, 호주, 대만 등과 안보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만을 미국의 맹방으로 지목하고 『대만관계법』에 의거, 대만에 무기수출을 확대하고 대만의 TMD 가입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

이다. 또한 그는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NMD와 TMD계획 지속추진 및 ABM조약 폐기와 CTBT조약 비준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부시의 이러한 안보정책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차기 미 대통령 하에서 중·미간 안보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은 외교노력을 통해 갈등을 완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 중·미관계가 적대관계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도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국의 WTO 가입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에 대해 PNTR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등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서부대 개발 등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협력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처럼 중·미관계에서 경쟁적 측면이 부각될 경우, 미·일동맹 강화, 중·일경쟁 심화, 중·러간 안보협력 확대 및 대만해협 긴장 악화 등이 예상된다. 동북아질서 불안정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중·미의 입장과 정책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미, 미·일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유지 그리고 TMD체제 구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욕구를 갖게 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러시아와 북한 등과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상하이 5개국회의체제와 같은 협력안보 메카니즘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다. 중국, 미국, 한국 사이에 TMD 구축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조성될 수 있고, 남북한에 대한 중·미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자회담에서 중·미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그만큼 어렵게 될 것이다. 나아가 중·미간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중·미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 수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간 이해대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중·미 협력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구도로 바뀔 수 있다. 중·미구도보다 중·일구도 하에서는 한반도문제 해결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역내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당분간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120)</sup> 그러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사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역할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미갈등을 완화하고 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미간 충돌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메카니즘으로 다자안보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내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북한 등이 동북아시아 다자안보대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다자안보대화는 역내 분쟁발발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히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120)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한·중·미 삼각구도가 한·중·일 삼각구도보다 한반도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한승주, “삼각관계의 태동: 미국, 중국 그리고 한반도,” 『계간사상』, 1999년 가을호 (1999. 9), pp. 67~69.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8-1999』.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한우근. 『韓國通史』. 서울: 을류문화사, 1980.
- 황병무, 멜 거토브. 『中國安保論: 人民解放軍 役割의 分析』.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2000.
- 黃遵憲. 『朝鮮策略』. 서울: 건국대 출판부, 1977.
- 胡鞍鋼 主編. 『中國走向』.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2000.
- 李而炳 主編. 『世紀之交的中國與世界』.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9.
- 熊志勇. 『中國與美國—邁向新世紀的回顧』.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95.
- 洪永宏 等. 『中美軍事衝突前前後後』.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1996.
- 蘇格. 『美國對華政策與臺灣問題』.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8.
- 閻學通. 『中國國家利益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6.
- \_\_\_\_\_. 『中國與亞太安全: 冷戰後亞太國家的安全戰略走向』. 北京: 時事出版社, 1999.
- \_\_\_\_\_. 『中國崛起—國際環境評估』.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8.
- 田進, 俞孟嘉. 『中國在聯合國—共同締造更美好的世界』.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9.
- 元成章, 王堅紅. 『當前國際環境與中國對外戰略, 方針, 政策』. 北京: 黨建

讀物出版社, 2000.

韓德強. 「碰撞—全球化陷阱與中國現實選擇」.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2000.

楊斌. 「威脅中國的隱蔽戰爭—美國隱蔽經濟戰與改革陷阱」.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2000.

錢俊生, 駱建華. 「環境, 資源, 人口與持續發展」. 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00.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Knopf, 1997.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New York: Basic Books, 1997.

Chung, Jae Ho. *The Korean-American Alliance and the 'Rise of China': A Preliminary Assessment of Perceptual Changes and Strategic Choices*. Discussion Pape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tanford University (February 1999).

Cline, Ray S. *World Power Trends and U.S. Foreign Policy for the 1980s*. Boulder: Westview Press, 1980.

Deng, Yong and Fei-Ling Wang. *In The Eyes of the Dragon: China Views the Worl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9.

Dibb, Paul. Towards a New Balance of Power in Asia, *Adelphi Paper*, No. 295.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May 1995.

Kbalilzad, Zalmay M.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 Rising China: Strategic and Military Implications*. Santa Monica, Calif.: RAND, 1999.

Wolf, Charles Jr. et al. *Long Term Economic and Military Trends, 1994~2015: The United States and Asia*. Santa Monica, Calif.: Rand, 1995.

## 2. 논문

- 김덕중. “2020-30년 동북아안보체제의 구조와 특성: 미·중/중·일 패권 경쟁.” 『동북아 국제질서의 미래와 한국』. 한국국제정치학회/한미안보연구회 주최 2000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2000. 10. 7.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 11. 4.
- 신상진. “미국의 NMD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國際問題』, 2000년 11월호 (2000. 11).
- \_\_\_\_\_. “중국의 대외관계연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서울: 나남, 2000.
- \_\_\_\_\_. “민진당 집권이후 중·대만관계: 분석과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8).
- \_\_\_\_\_. “북미관계와 중국.” 『통일시론』, 1999년 겨울 (2000. 1).
- 전성훈.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북한 핵문제: 전망과 과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정재호. “미중관계와 한반도.” 『한반도와 미국: 어제, 오늘, 내일』.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 주최 한미포럼 발표문, 2000. 8. 19.
- 정종욱. “4대 강국의 한반도정책.” 『계간사상』, 2000년 가을호 (2000. 9).
- 최종철.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안보선택.” 『동북아 국제질서의 미래와 한국』. 한국국제정치학회/한미안보연구회 주최 2000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2000. 10. 7.

- “페리보고서.” 『통일시론』, 1999년 겨울 (2000. 1).
- 한승주. “삼각관계의 태동: 미국, 중국 그리고 한반도.” 『계간사상』, 1999년 가을호 (1999. 9).
- “金正日會見遲浩田.” 『文匯報』, 2000. 10. 26.
- 劉華秋. “指導新時期對外工作的強大思想武器.” 『人民日報』, 2000. 7. 13.
- 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國務院新聞辦公室. “一個中國的原則與臺灣問題.” 『新華月報』, 2000年 第3期 (2000. 3).
- 曾馳遠. “中美圍繞最惠國待遇交鋒.” 『爭鳴』, 1991年 6月 (1991. 6).
- 奮然. “美國為何調整對台關係?” 『鏡報』, 1995年 2月號 (2000. 2).
- 齊辛. “強硬路線君臨中國大陸.” 『九十年代』, 1994年 5月號 (1994. 5).
-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4. 3. 11.
- 陶堅. “構建中美關係的戰略經濟基礎.” 『世界知識』, 1998年 第14期 (1998. 7).
- 徐學銀, 朱憲. “評新干涉主義.”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8期 (1999. 8).
- 施魯佳. “美國推行全球霸權戰略的架構與步驟.” 『瞭望』, 1999年 第19期 (1999. 5).
- “中國促警斥新干涉主義.” 『文匯報』, 1999. 8. 26.
- “奮發圖強, 勝利前進.” 『人民日報』, 1991. 9. 9.
- “歡迎朝鮮為實現朝鮮半島無核化超出的努力.” 『人民日報』, 1991. 12. 25.
- 辛季. “水到渠成, 意義深遠.” 『文匯報』, 1992. 8. 25.
- 黃甫平麗. “中美關係的今天與明天.” 『瞭望』, 2000年 第19期 (2000. 5).
- “朝鮮接受核查, 中國表示歡迎.” 『文匯報』, 1994. 2. 18.
- “安理會決意促朝鮮遵守不核擴散條約.” 『文匯報』, 1993. 5. 13.

- 張大林. “日美同盟何處去.”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1期 (1996. 1).
- . 評日美安全保障聯合宣言.”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4期 (1999. 10).
- 袁明. “21世紀初東北亞大國關係.”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4期 (1996. 10).
- 李福興, 陳世森. “朝鮮半島問題四方會談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2期 (1998. 2).
- 蜀聲. “中共鬪美一王牌—北韓核武.” 『爭鳴』, 1994年 5月號 (1994. 5).
- “朝鮮半島問題四方正式會談第一次會議在日內瓦舉行.” 『新華月報』, 1998年 第1期 (1998. 1).
- 安洪泉. “調整中的美國對朝鮮政策.”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7期 (1999. 7).
- “未來十年年均增長擬達7.9%.” 『文匯報』, 2000. 1. 18.
-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綜合國力課題組. “世界主要國家綜合國力評估.” 『國際資料信息』, 2000年 第7期 (2000. 7).
- 袁鵬. “當前中美關係性質芻議.” 『現代國際關係』, 2000年 第9期 (2000. 9).
- 楊成緒. “當前國際形勢六大趨勢.” 『瞭望』, 2000年 第8期 (2000. 2).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國防.” 『新華月報』, 1998年 第12期 (1998. 12).
- “中國新導彈防衛力增強.” 『文匯報』, 1999. 9. 15.
- 文萍. “村民自治從這里發端.” 『瞭望』, 1999年 第41期 (1999. 10).
- 李琮. “對世界格局多極化的幾種豫測.” 『瞭望』, 2000年 第21期 (2000. 5).
- 林利民. “未來十年周邊安保環境的變化.” 『瞭望』, 2000年 第21期 (2000. 5).

- \_\_\_\_\_. “關於中國21世紀初對外戰略的幾點思考.” 『現代國際關係』, 2000年 第3期 (2000. 3).
- 張蘊嶺. “中國安全環境觀察.” 『瞭望』, 2000年 第14期 (2000. 4).
- 鄧小平. “在武昌,深圳,珠海,上海等地的談話要點.” 『鄧小平文選』,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美中雙邊WTO協議概要.” [www.chinabulletin.com/luntan/wto/gaiyao.gb](http://www.chinabulletin.com/luntan/wto/gaiyao.gb).
- 閻學通. “戰區導彈防禦系統與東北亞安全.” 『中國評論』, 總第30期 (2000. 6).
- 劉江永. “美日重建冷戰後同盟.” 『世界知識』, 1996年 第9期 (1996. 5).
- 唐天日. “揭穿日美防衛合作的本質.” 『瞭望』, 1999年 第18期 (1999. 5).
- 肖楓. “美全球戰略下的世界走向.” 『人民日報』, 1999. 5. 31, 6. 1.
- 蔣建清. “北約二十一世紀新戰略及其影響.” 『國際問題研究』, 1999年 第3期 (1999. 7).
- 徐學銀, 朱憲. “評新干涉主義.”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8期 (1999. 8).
- 楚樹龍. “冷戰後中美雙邊和地區戰略與安全關係.” 『現代國際關係』, 2000年 第5期 (2000. 5).
- \_\_\_\_\_, 王在邦. “關於國際形勢和我對外戰略若干重大問題的思考.” 『現代國際關係』, 1999年 第8期 (1999. 8).
- 王在邦. “北約新戰略挑戰世界新秩序.” 『瞭望』, 1999年 第16期 (1999. 4).
- 馮玉軍. “對中俄戰略協作伙伴關係的再思考.” 『現代國際關係』, 1998年 第8期 (1998. 8).
- “錢其琛就亞太形勢闡述我觀點和立場.” 『人民日報』, 1997. 7. 28.
- 時永明. “亞太安全中的矛盾與合作.” 『國際問題研究』, 1997年 第3期

- (1997. 7).
- 丁奎松. “亞太大國關係對地區安全合作的影響.” 『現代國際關係』, 2000年 第1-2期 (2000. 2).
- 韓輝. “美國發展和部署反導武器的意圖與影響.” 『瞭望』, 2000年 第25期 (2000. 6).
- 紫尙金. “亮点,熱点,陰影—上半年我國周邊安全形勢回顧.” 『瞭望』, 2000年 第27期 (2000. 7).
- 畢玉蓉. “駐韓美軍爲何賴着不走.” 『解放軍報』, 2000. 7. 10.
- 于美華. “駐韓美軍爲何賴着不走.” 『瞭望』, 2000年 第39期 (2000. 9).
- 左翼青年. “美帝國主義從朝鮮半島滾出去!” [www.chinabulletin.com/luntan/guogi/zouyi.txt](http://www.chinabulletin.com/luntan/guogi/zouyi.txt)
- “2000年中國的國防.” [www.xinhuanet.com/mil/htm/20001016/170434.htm](http://www.xinhuanet.com/mil/htm/20001016/170434.htm)
- “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defenselink.mil/news/jun2000/china06222000.htm](http://www.defenselink.mil/news/jun2000/china06222000.htm).
- Awanohara, Susumu and Lincoln Kaye. “Number Gam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5, 1993.
- Bell, Coral. “American Ascendancy and the Pretense of Concert.” *The National Interest*, No. 59 (Fall 1999).
- Brzezinski, Zbigniew. “Living with China.” *The National Interest*, No. 59 (Spring 2000).
- Clinton, Bill. “To Advance the Common Interest in a More Open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 1994.
- Deng, Yong. “The Chinese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hina Quarterly*, No. 154 (June 1998).
- “Don’t Break America’s Strongest Bridge to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1, 1991.

Doyle, Michael W.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December 1986).

Friedman, Edward. "The Challenge of a Rising China: Another Germany?" Robert J. Lieber, ed. *Eagle Adrift: American Foreign Policy at the End of the Century*. New York: Longman, 1997.

Freeman Jr., Chas. W. "Sino-American Relations: Back to Basics." *Foreign Policy*, No. 104 (Fall 1996).

Garrett, Banning and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Hsiung, James C. "China's Omni-directional Diplomacy."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Jia, Hao and Zhuang Qubing.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2, No. 12 (December 1992).

Klintworth, Gary. "Greater China and Regional Securit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8, No. 2 (November 1994).

Krauthammer, Charles. "Why We Contain China." *Time*, July 31, 1995.

Lieberthal, Kenneth. "A New China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6 (November/December 1995).

Mann, Jim. "US Starting to View China as a Potential Enemy." *Los Angeles Times*, April 16, 1995.

McClaran, John P. "U.S. Arms Sales to Taiwan: Implications for

- the Future of the Sino-U.S. Relationship.” *Asian Survey*, Vol. XL, No. 4 (July/August 2000).
- Munro, Ross H. “Eavesdropping on the Chinese Military: Where It Expects War—Where It Doesn’t.” *Orbis*, Vol. 38, No. 3 (Summer 1994).
- O’Brien, Kevin J. and Liangjiang Li. “Accommodating Democracy in a One-Party State: Introducing Village Elections in China.” *China Quarterly*, No. 162 (June 2000).
- Oksenberg, Michael. “The China Problem.” *Foreign Affairs*, Vol. 70, No. 3 (Summer 1991).
- Preston, Julia. “China Not on Board Over North Kor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11, 1994.
- Rice, Condoleezza.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 Roy, Denny. “Hegemon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Summer 1994).
- Shambaugh, David. “Containment or Engage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2 (Fall 1996).
- \_\_\_\_\_. “Sino-American Strategic Relations: From Partners To Competitors.” *Survival*, Vol. 42, No. 1 (Spring 2000).
- Saunders, Phillip C. “China’s America Watchers: Changing Attitudes Towards the United States.” *China Quarterly*, No. 161 (March 2000).
- Segal, Gerald. “Does China Matter?” *Foreign Affairs*, Vol. 78, No.

5 (September/October 1999).

\_\_\_\_\_. “East Asia and the Constraint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4 (Spring 1996).

Sutter, Robert. “Tiananmen’s Lingering Fallout on Sino-American Relations.” *Current History*, Vol. 90, No. 559 (September 1991).

Waldron, Arthur. “How Not to Deal with China.” *Commentary*, Vol. 103, No. 3 (March 1997).

Wang, Hongyi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 XL, No. 3 (May/June 2000).

Wang, Fei-Ling. “Joining the Major Powers for the Status Quo: China’s Views and Policy on Korean Reunification.” *Pacific Affairs*, Vol. 72, No. 2 (Summer 1999).

White, Tyrene. “Village Elections: Democracy from the Bottom Up?” *Current History*, Vol. 97, No. 620 (September 1998).

Zoellik, Robert B.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 3. 기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人民日報」.

「文匯報」.

*China Daily*.

[www.xinhua.org](http://www.xinhua.org)

[www.peopledaily.com.cn](http://www.peopledaily.com.cn)

[www.pladaily.com.cn](http://www.pladaily.com.cn)

[www.chinatimes.com.tw](http://www.chinatimes.com.tw)

[www.washingtonpost.com](http://www.washingtonpost.com)